

2016 가운실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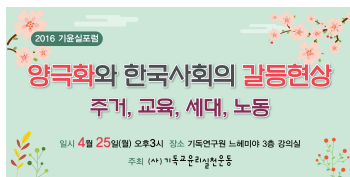
---

#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 주거 교육 세대 노동

---

-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3시
- 장소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행일** \_ 2016년 4월 25일  
**발행인** \_ 홍정길  
**편집인** \_ 조제호  
**편 집** \_ 박진영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http://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행사 이후 PDF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사 순서

| 시간        | 프로그램         | 진행 및 강연자                                    |
|-----------|--------------|---|
| 3:00-3:10 | 인사말          | <b>신동식</b> 본부장<br>(정직윤리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
| 3:10-3:30 | 주제발제 1       | <b>고석동</b> 사무국장<br>(전국세입자협회)                |
| 3:30-3:50 | 주제발제 2       | <b>안상진</b> 부소장<br>(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 3:50-4:10 | 주제발제 3       | <b>오찬호</b> 박사<br>(『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대학교』) |
| 4:10-4:30 | 주제발제 4       | <b>우상범</b> 박사<br>(평화누리 실행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 4:30-5:00 | 토론<br>및 질의응답 | <b>진행</b> : 사회자<br><b>패널</b> : 발제자          |

## ■ 주제발제

1. 저성장시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고석동 사무국장 \_ 전국세입자협회 07
2.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안상진 부소장 \_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14
3.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  
오찬호 박사 \_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대학교』 28
4. 노동 양극화 현황,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  
이상범 박사 \_ 평화누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44

##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소개



## 저성장시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고 석 동 사무국장 | 전국세입자협회

### 1. 소유의 개념이 강한 한국 사회

#### (1) 봉건시대

최근에 끝난 SBS 드라마 '육룡의 나르샤' 보면 정도전은 계민수전(計民授田)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고,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또한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주나라와 다른 정전제(井田制)와 전론(田論)를 통해서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의 불평등한 점유의 문제로 당대의 개혁가들은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봉건시대는 전통적으로 토지는 국가(왕)의 소유의 개념이었으나 왕족과 관료들의 사점으로 인한 토지의 세습과 문호가 개방되면서 상·수공업의 활성화로 화폐유통의 진전됨에 따라 토지 매매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근대의 소유의 개념이 성립되었다.

####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는 수탈의 목적으로 토지조사령(1910년 10월~1918년 12월)을 통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하면서 전통적으로 농민의 경작권이 상실되고 법률적으로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로인하여 소작농들의 치열한 소작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대 강점기부터 지방행정도시 이전과 철도 건설등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였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울, 평양 등 도시에는 집장사꾼들이 성행하고, 임대료 폭등 때문에 1929년 11월 초 평양의 관리 회사원 등 월급쟁이들은 '차가인 동

맹'을 발족시키고 집세 인하 운동에 착수했다.

1929년 "경성의 주택 수는 7만 9192호, 그중에서 전세 혹은 사글세로 들어 있는 호주 수가 5만 3386명이며 이 중 조선인 호주 수가 3만 1329명에 이른다. 1호에 4~5명씩 산다고 한다면 경성 시내의 조선인 차가인 수는 14만 980명", 당시 경성 인구가 30만이었으니 인구의 절반이 제 집 없이 떠돈 셈이다. 당연한 결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다고 엄동설한에 방 구들장을 뜯어 간 주인의 처사가 비인도적이라고 꾸짖는 기사도 있다. (조선일보 1928년 12월 9일 자)

### (3)해방이후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 개혁이 시행되었고,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통과, 1950년 3월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이 공포 되었으나 한국전쟁 등 지주 세력의 반발로 초기의 농지 개혁의 취지는 퇴색되었다.

### (4)산업화

박정희 정부는 제3한강대교(한남대교)을 건설하고, 강남의 시대를 열면서 끊임 없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고,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빈민들을 외곽으로 내쫓았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또한 신도시 개발등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왔다. 최근까 지도 주택은 거주목적보다 소유, 즉 자산의 형성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어 것이 현실이다.(\*참고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98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1989년에는 계약기간을 1년에서 현행 2년으로 연장으로 개정)

## 2.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전월세 주거 상황

### (1)저성장, 저금리 시대

-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저성장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 집을 가진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 비율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 월세화는 가속화 되고 있지만, 아직 전세비율은 58.9%이다.



## (2)전월세의 폭등<sup>1)</sup>

-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지만 2011년 이후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특히 박근혜 정부 3년(2013년~2015년) 동안의 상승폭이 크다.  
전국은 준전세(104.9%), 월세(53.4%), 전세(35.8%)  
서울은 준전세(106.8%), 월세(66.0%), 전세(35.6%)
- 수도권 지역에서 월세전환가와 준전세 상승률은 45% 이상이다.

## 3. 정부의 주거 정책과 문제점

MB정부의 이어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 살라.’고 한 결과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 (1)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가격 부양 및 대출 완화

- 주택구입 자금 지원 강화, LTV 및 DTI 완화, 청약자격 완화 등
-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 기조 :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등

### (2)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건설사를 통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8년간 거주한다는 정책
- '15년 10개 리츠 1.4만호 공급, '16년 20개 내외 리츠 2.5만호 공급
- 국공유지 우선지원, 그린벨트해제, 주택도시기금, 각종세제 혜택
- 공적지원을 받지만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어서 주변시세보다 높아서 중산층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 소득위 9분위 이상 고소득을 위한 정책으로 비판
-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어서 주변 시세를 동반 폭등 시키는 우려가 있음
- 월세화의 가속화를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됨.
-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가능, 공공성 훼손

### (3)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활성화 : 재건축 연한 단축 등

---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표1]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 발표 내용

| 발표일  | 정책    | 주요내용                               |   |
|------|-------|------------------------------------|---|
| 2013 | 4/1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 초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목돈안드는 전세                     |
|      | 8/28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 주택 취득세율 인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      | 12/3  | 4.1, 8.28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추진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목돈안드는 전세 활성화 방안,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
| 2014 | 2/26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임대소득 과세 방식 정비,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
|      | 7/24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시장 과열기 도입규제 합리화(LTV, DTI 완화),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청약제도 개선, 재정비 활성화                |
|      | 9/1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재건축 연한 단축, 대규모 택지 공급 억제   |
|      | 10/30 |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 발표                   | 매입·전세임대 이사철 집중 공급, 재건축 이주 수요 관리화,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준공공임대 주택 활성화        |
| 2015 | 1/13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
|      | 2/27  |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                        | 유주택자 감정도 폐지, 청약자격 요건 완화   |
|      | 4/1   | 민간 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시행             | 주택가격, 거래량 등에 따른 적용 요건 마련  |
|      | 4/6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      | 9/2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 (4)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 OECD 평균 11%대이지만 한국은 5.6% 수준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2013년~2014년 재고 증가는 36,264호

### 4. 계층별 세대별 주거의비 부담 가중

#### (1) 삼포, 오포 시대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세대

- 20대 평균임금 130만원.
- 비정규직과 학자금 대출 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
-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하여 1인가구의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3%(2012년 국토교통부)
- 높은 주거 부담으로 고시원이나 반지하등이 거주하는 1인 가구 증가.
- 서울시 세어하우스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등으로 공급하지만 부족

## (2)서민들의 가계대출 증가

- LTV, DTI 완화한 것을 은행권 여신 심사 강화 후에도 가계 대출 꾸준히 증가
- 서민들은 높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전세 거주유지를 위한 대출

## (3)저소득층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sup>2)</sup>

- 소득하위 20%의 월세비중은 33%로, 상위 20%의 8.1%보다 4배나 크다. 월세주거비 1% 오르면 전체 가계소비 0.02% 줄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0.09% 감소해 평균보다 4.5배 감소. 월세 1% 오를 때 소득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는 0.5%증가

## 5. 주거정책으로 전환이 필요

부동산,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책으로 하는 정책, 즉 공급자적인 정책에서 사용자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거복지청을 신설하여 한다.

### (1)세계 경제 위기 이후

- 유럽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하였다가 사회주택 등 공급이 확산되면서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파리, 뉴욕, 베를린 등에서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미국 뉴욕의 비상임차인보호법은 2015년 기한 연장되면서 개정·강화되었고, 프랑스 파리는 2015년 8월, 독일 베를린은 2015년 6월부터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는 등 많은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2)전월세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 이미 전월세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져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주택의 면적, 연수, 구조등을 고려하여 만든 표준임대료제도 도입해야 한다.

### (3)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사회주택 확대

장기적으로 재정조달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비영리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

---

2) 주택시장의 문제와 주택정책의 전환과제(조명래 단국대 교수)

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별, 세대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많은 이익을 남기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나 주택협동조합이 지원을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4)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 임차인단체, 임대인단체로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발표하는데, 이와 비슷한 협의체로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으로 가기 어려운 소소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6.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 또한 세입자 비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들과 세입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풀어가야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집을 소유의 개념보다 주거권, 즉 거주하는 인간의 기본 인권으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1)토지 및 주택은 빌려 쓰는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레25:23)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유의 개념이 아닌 모두가 빌려 쓰는 것이라는 희년의 정신을 세기며 통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적인 적용과 차이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 (2)사회주택 공급 교회가 나서야

네덜란드 국가는 주택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35%를 차지하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보통 20%이상이다. 그 결과 주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주거비 부담에서 일정부분 자유롭다. 한국은 주택협동조합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지역의 청년들이나 세입자 서민들을 위해서 사회주택 개념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정부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3)적절하게 받는 임대인 성도 네트워크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임대인 성도를 교회가 세입자 성도와 연결해주거나 일정하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방식도 시행하면 좋겠다. 

##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안 상 진 부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들어가며

더는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정서와도 맞고, 연구결과로도 나오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부와 경제적 여건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진학에 정적 관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는 그동안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왔기에 이 논란은 더욱 뼈 아프다. 이번 발제에서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 가지,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 교육 양극화 현상의 원인 I : 고교입학전형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입학전형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의 문제만 다루면 되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행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정책적 목표였던 수평적 다양성이 아니라 수직적 다양성으로 고교가 서열화되었다. 그 결과 2015년 고교체제에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형 학교 수는 [표1]과 같이 되었다. 여기에 일반고가 1,537개, 특성화고 498개는 빠져 있다. [표1]의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소위 좋은 학교, 서열에서 일반고보다 높은 학교이다.

[표1] 2015학년도 영재학교 및 특목고, 자율형 고등학교 현황

| 학교 유형 | 영재학교  |       | 과학고 | 국제고 | 외국 어고 | 예술고 체육고 | 마이스 터고 | 자율형 사립고 |       | 자율형 공립고 |
|-------|-------|-------|-----|-----|-------|---------|--------|---------|-------|---------|
|       | 과학 영재 | 과학 예술 |     |     |       |         |        | 전국 모집   | 광역 모집 |         |
| 학교 수  | 7     | 1     | 20  | 7   | 31    | 27/16   | 39     | 10      | 40    | 111     |

문제는 그 수가 116개로 전체 2,344개의 약 4.9%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대학과 비교하자면 2016학년도 수능 응시생 631,184명을 기준으로 소위 서연고 서성한 이중경외시 모집정원 35,088명이 5.5%로 비슷하다. 즉 소위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거의 상위 10개 대학을 채울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위 좋은 학교가 많아지고,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서열화 되면서, 명문대 입학 경쟁이 고교 입학경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다. 이렇게 시기가 빨라져서 생긴 문제점은 입시 경쟁을 준비하는 학생의 사교육 시작 시기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사교육은 그 비용을 감당하는 부모의 재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질과 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사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은 이미 그 영향력이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5,470명의 초등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설문조사에 잘 나타났다. 과목별로 '고교 사교육을 언제 시작했는가?' 는 질문에 국어의 경우, 응답자의 74.2%, 영어 67.2%, 수학 73.0%, 예체능과 제2외국어 70.3%가 이미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2] 과목별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초등학교 입학 이전과 이후)

단위: %(명)

| 과목        | 초등학교 입학 이전     | 초등학교 입학 이후    | 받지 않음          | 합계            |
|-----------|----------------|---------------|----------------|---------------|
| 국어        | 74.2<br>(4015) | 6.8<br>(366)  | 19<br>(1031)   | 100<br>(5412) |
| 영어        | 67.2<br>(3633) | 10.5<br>(569) | 22.3<br>(1214) | 100<br>(5416) |
| 수학        | 73.0<br>(3954) | 7.3<br>(393)  | 19.7<br>(1064) | 100<br>(5411) |
| 예체능·제2외국어 | 70.3<br>(3771) | 14.9<br>(800) | 14.8<br>(795)  | 100<br>(5366) |

고입 경쟁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소위 좋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3배가 되는 분기 수업료와 각종 활동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 비용을 3년 내내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좋은 학교는 입시가 있다. 서울지역 일반고가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비해 소위 좋은 학교는 면접, 구술시험, 서류 등 준비할 것도 많고 스스로 대비하기도 어렵다. 이 과정에서 다시 사교육을 깊이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은 세 가지 층위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 첫째, 중학교 내신 대비 사교육, 둘째,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대비를 위한 사교육, 셋째, 중학교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 마케팅 전략에 의한 진학 후 내신 대비과정 즉 고등과정 선행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사교육의 영향은 합격자 분포에도 나타난다. [그림1]을 보면 A 자사고에 지원한 강남 4구 소속 중학교의 지원자 수 대비 합격자 수가 나타나 있다. 내용을 보면 해당 지원 학생의 서울시로 봤을 때 66.5%의 비율이었지만, 합격생의 비율로 보면 81.5%로 크게 상승한다. 강남 4구 소속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보다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A 자사고 입시를 대비한 사교육이 지역적으로 매우 많다는 사실이 더욱 설득력 있다.

[그림1] 2012학년도 A 자사고 강남4구 지원자수 대비 합격자수 비율

| 중학교출신<br>구별 | 시군 개수 | 2011학년도/일반전형 |      | 2012학년도/일반전형 |      |
|-------------|-------|--------------|------|--------------|------|
|             |       | 지원자수         | 합격자수 | 지원자수         | 합격자수 |
| 강남구         | 1     | 94           | 19   | 56           | 19   |
| 서초구         | 1     | 36           | 7    | 25           | 11   |
| 송파구         | 1     | 46           | 5    | 26           | 11   |
| 양천구         | 1     | 37           | 2    | 26           | 4    |
| 소계          | 4     | 213          | 33   | 133          | 45   |
| 서울시         | 24    | 372          | 55   | 200          | 55   |
| 비율(%)       | 16.7  | 57.3         | 60.0 | 66.5         | 81.5 |

출처: 경기도교육청



## 교육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Ⅱ : 대학입학전형 중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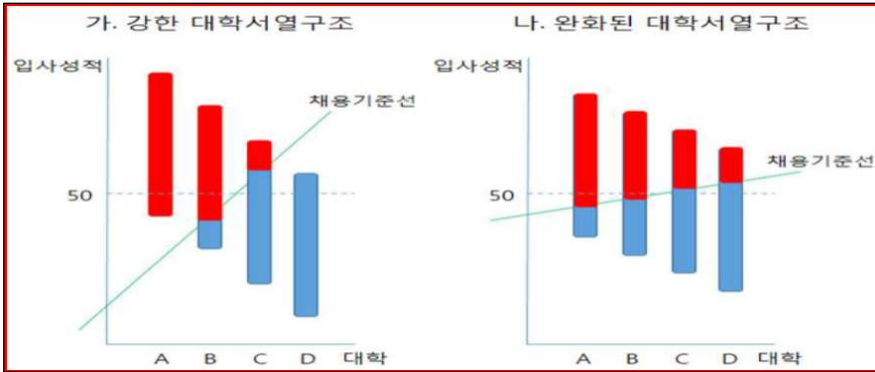
대학입학전형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은 중의적이다. 일반적인 의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 특히 명문대 입학을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함을 뜻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만큼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대표적인 전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교육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수능이 사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대비하기 좋기 때문이다. 수능은 표준화 시험의 대표적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시험은 시행 시기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제한된 시험 범위가 있으며, 매년 일정한 문제 형태를 보이고, 문제 구성이 특정 영역에 따라 정해져 있는 형태를 뜻한다. 이런 표준화 시험은 이미 치러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 출제 패턴을 익혀서 이를 대비시켜 주는 사교육이 가장 대비하기 쉬운 형태이다. 즉, 비싼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수능 점수로 대학 간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비싼 돈을 들인 사교육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 간 대학은 신입생의 높은 수능 입학점수로 대학 서열화의 상위권에 위치한다. 대학 간 서열화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존재한다. 문제는 서열화의 기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신입생의 수능 성적으로 대학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 대학 구성원의 노력으로 그 서열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대에 들어가는 순간, 지방 하류대생이 되어 버리고 그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 하류대라는 굴레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기 쉽다.

셋째는 이 대학 서열화의 굴레가 채용의 차별까지 연결된다. 김영철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2013년,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논문을 통해 변별력이 높은 대학입시가 채용과정의 차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이중 선별구조(two-staged screening process)로 이해하고 일차적 선별(대학입시)의 변별력이 강할수록 이차적 선별(채용), 즉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계적 차별' 행위 역시 증대함을 보인 것이다.

[그림2] 대학서열구조와 채용기준선의 관계



출처: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김영철, 2013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은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수능 점수는 대학 수준을 결정하며, 결국 그 대학 수준이 채용까지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 개선방안 1 : 고교체제는 간단히,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운영

고교 교육과정에서 있어 다양성은 중요한 가치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체제의 다양성을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학교를 만들었다. 그 결과 새로운 학교들은 서열화된 형태로 변질하였다. 따라서 다양성은 학교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추구해야 한다. 즉 체제는 간단히, 그 안에서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과고는 대폭 축소 후 영재학교 전환 등 현재의 고교체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그림3] 단순화된 새로운 고교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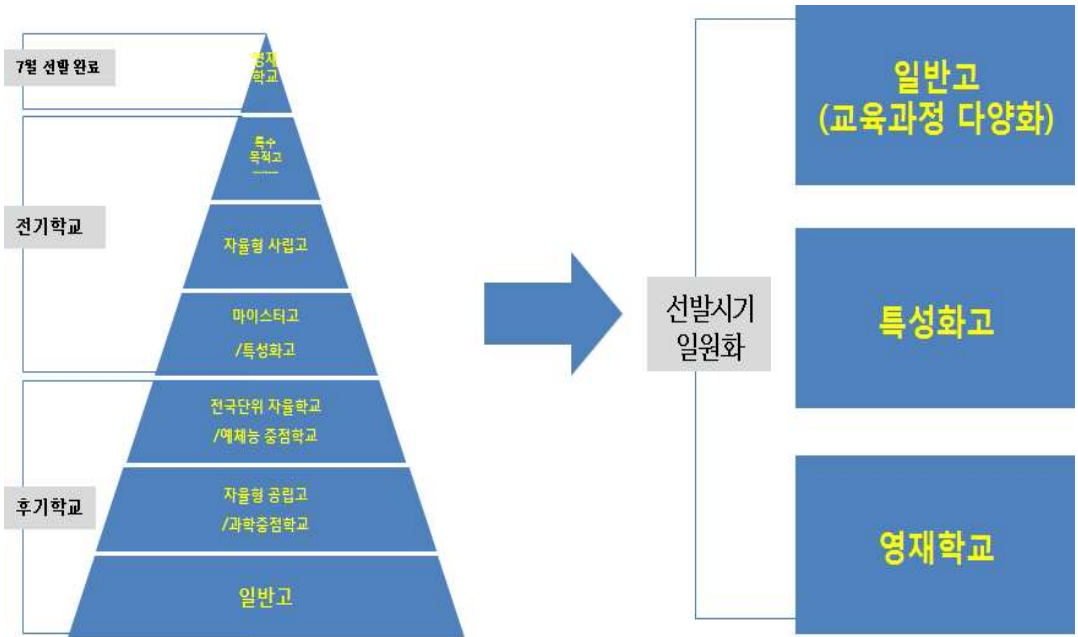
| 일반고   | 특성화고                     | 영재학교             |
|---|--------------------------|------------------|
| 현행 일반고, 자사고, 외고 및 국제고, 과고 중 대부분   | 기존의 특성화고, 특목고였던 예술고, 체육고 | 현행 영재학교, 과고 중 일부 |
| ※ 외고 및 국제고, 과고는 각각 외국어와 과학 교육과정 특성화 일반고로 운영<br>※ 자사고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는 그대로 보장<br>※ 기존의 과고 중 2~3곳을 영재학교로 전환 |                          |                  |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렇게 고교체제를 개선하고 나서, 고입전형에서는 일반고에 '선지원-후추첨' 즉 무시험 입학전형을 전면 도입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과학 교육과정 특성화 일반고, 외국어 교육과정 특성화 일반고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만약 지원자보다 특성화 과정 학교 수가 부족하다면 다음 해에는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과학, 외국어 교육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특권학교에 가야 대학입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허수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고의 경우는 관련 과목 내신 성적을 보거나 실기시험 또는 서류/면접 전형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각 해당 영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의 노력을 보므로써 특성화 학교 적격자 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소수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현재와 같이 복잡한 다단계 평가를 폐지하고, 면접 중심의 입학담당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닌 수월성 교육이 꼭 필요한 영재를 찾아내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 개선된 고교체제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개선방안 2 : 대학입학전형 개선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3단계 개선 방안<sup>3)</sup>

| <개선 방안 설계의 기본 원칙>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되, 다른 대입전형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li> <li>▶ 수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설계</li> </ul> |

### 1 <1단계> 개선 방안(2019~2020학년도)의 주요 특징

| <수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학년도부터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br/>(※ 정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원점수 등의 점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대학에 제공)</li> <li>▶ 2019학년도부터 수능 수학 시험범위 축소와 선택과목 도입<br/>(※ 선택과목은 필요한 학생만 응시)</li> <li>▶ '쉬운 수능' 기조 유지<br/>(※ '쉬운 수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난이도를 의미)</li> </ul> |
| <논술 등 대학별고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고사의 정상화 : 교육과정 준수, 본고사형 출제금지, 수능 최저기준 폐지<br/>(※ 선행교육규제법의 엄격한 시행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 가이드라인 도입)</li> <li>▶ 대학별고사의 비중 점진적 축소</li> </ul>  |
| <학생부 전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 및 확대<br/>(※ 비교과를 제외하고, 교과 관련 자료와 기록에 대한 정성평가에 초점)</li> </ul>  |

3) 2014-02-24 대입전형 3단계 개선안(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19학년도부터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

- 현행 상대평가 방식인 수능의 평가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수능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최근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절대평가 전환을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절대평가를 도입해도 예를 들어, 전 과목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변별력을 유지
- 다만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변별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점자 처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점수 등 점수 관련 자료를 대학에 제공

■ **2019학년도부터 수학 공통 시험범위 축소와 선택과목 도입**

- 2019학년도 수능부터 수학의 시험범위를 '수리 나(문과)'는 [수학 I]과 [수학 II]로 '수리 가(이과)'는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으로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도입하여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전공)의 특성에 따라 한 과목을 응시
- 각 대학은 전공계열(예를 들어, 인문/상경/생명/이공)의 특성에 따라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학생이 단순히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

[표3] 수학 수능시험범위 축소 및 선택과목 운영 안(案)

|    | 공통과목               | 선택과목                              |
|----|--------------------|-----------------------------------|
| 문과 | 수학 I, 수학 II        | 택0 또는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중 택1          |
| 이과 |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 택0 또는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택1 |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 예를 들어, 상위권 학생 중에서도 인문계열 진학을 원하거나, 문/이과 학생 중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공통과목 시험만 보고 선택과목은 응시하지 않는 것이 가능
- 이와 같이 수능 수학을 개선하게 되면,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 완화,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 존중, 소위 '수포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11월에 시행되

는 수능 때문에 자연계 수학에서 선행학습과 학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유발하는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

## ■ '쉬운 수능' 기초 유지

- 금년 수능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물'수능 관련 논란은 근본적으로 수능이 상대평가 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
- 수능이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되면, 설사 한 두 문제를 실수로 틀리더라도 지금과 같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정시에서는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물'수능 관련 논란은 거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물'수능이라는 비판 자체가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존재
- 일부에서는 '쉬운 수능'이라는 표현이 교육학적으로 타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봐도 현행 수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쉬운 수능'을 표방하는 것은 정책기조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 학교 현장 교사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현행 수능의 난이도는 교육과정을 대표하는 교과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볼 때 훨씬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

## ■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정상화와 점진적 비중 축소

-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준수, 본고사형 출제금지,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을 2017학년도부터 엄격히 시행
  - 교육과정 준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을 통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며, 본고사형 출제금지와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위해서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 대학별고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부전형의 비중을 점차 확대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논술전형 모집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 34.9%, 2015년 31.8%, 2016년 28.8%로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

- 하지만 2016년도에서 수시 전체 인원의 48.2%를 모집하는 성균관대를 비롯하여 대학별로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인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 및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초점을 정규 교육과정 밖의 비교과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와 관련된 수업과 평가 활동 및 기록으로 이동
- 이를 위해 평가요소에서 비교과 영역을 제외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교과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표4]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전형요소와 전형방법 예시

| 전형요소                                 | 전형방법                    |
|--------------------------------------|-------------------------|
| 학생부 교과 성적                            | 자격기준으로 활용(ex. 2~3배수 선발) |
| 교과 담당 교사의 서술적 기록                     | 최종 합격자 선발               |
|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수행평가 자료 포트폴리오 |                         |
|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한 확인면접                    |                         |

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도입 초기에는 전체 모집인원의 10%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차로 대입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으로 발전

☑ <1단계> 개선 방안이 지향하는 각 대입전형의 비중

| 수능전형 | 대학별고사  | 학생부종합전형 |        |
|------|--------|---------|--------|
|      |        | 교과      | 교과+비교과 |
| 30%  | 10~20% | 10~20%  | 30~40% |

## 2 <2단계> 개선 방안(2021~2024학년도)의 주요 특징

|   |
|---|
| <b>&lt;수능&gt;</b>   |
| ▶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수능 전 과목의 시험 범위를 문/이과 공통범위로 축소   |
| <b>&lt;논술 등 대학별고사&gt;</b>   |
| ▶ 기존의 <1단계> 개선 방안 유지  |
| <b>&lt;학생부 전형&gt;</b>   |
| ▶ 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자료 대입에 활용<br>(※ 단, 고교 선발방식 전면적인 '선지원-후추첨'제도 도입 또는 일반고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균형선발전형' 최소 30% 도입이 전제 조건) |

### ■ 수능 전 과목의 시험범위를 문/이과 공통범위로 축소

- 2018학년 고1부터 적용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춰 2021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전 과목의 시험범위를 문/이과 공통범위로 축소
  - 교육부가 2013년 8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서 제시한 수능체제 개선선안 중 제3안(문/이과 완전 융합안)과 유사
- 수능에서는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평가
  - 대입전형에서는 수능을 통해 공통 학업능력을, 그리고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한 과목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평가

### ■ 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자료 대입에 활용

- 작년 고1부터 시행되었으나, 대입반영 여부는 현재 결정을 유예한 상태인 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자료를 '내신 부풀리기' 대책을 강구하여 2021학년도 대입부터 활용
  - 일선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대책(예를 들어, 호주와 같이 전국 단위 평가 자료를 활용한 학교 간 차이 보정, 정보공개와 대학의 누적 데



이터를 활용한 내신 부풀리기 학교 불이익 부여 등)을 남은 기간 동안 준비

- 단, 현행과 같이 입학성 성적에 의해 서열화 되는 고교 선발 방식을 그대로 둔 채 절대평가 자료를 대입에 반영할 경우, 특목고 수요 폭증과 일반고 몰락 심화라는 결과는 자명하기 때문에 각 고교 유형의 특성은 유지하더라도 선발 방식은 전면적인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반드시 선행하여 실시

- 만약 고교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당 2명씩 추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모집인원의 최소 30% 정도 도입하여 절대평가로 인한 일반고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 주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본 결과, 10개 대학 학생 모집 인원의 30%(33,345명 × 0.3 = 10,004명)를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뽑으면, 특목고/자사고 추천 학생이 전원 합격(전국 113개 학교 × 2명 = 2,260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10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합격하는 일반고 학생의 비율(2014학년도 기준, 특목고/자사고 26.1% vs 일반고 66.9% - 자료 출처 : 유은혜 의원실)을 상회하는 특목고/자사고 22.6% vs 일반고 77.4%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 안에서 전부 시행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면 일반고 학생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으로 교실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확대되고 학생부 기록 역시 지금보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학생부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

☑ <2단계> 개선 방안이 지향하는 각 대입전형의 비중

| 수능전형 | 대학별고사  | 학생부종합전형 |        |
|------|--------|---------|--------|
|      |        | 교과      | 교과+비교과 |
| 30%  | 10~20% | 20~30%  | 20~30% |

|                                      |
|--------------------------------------|
| <b>&lt;수능&gt;</b>                    |
| ▶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수시/정시 모두 등급만 적용  |
| <b>&lt;논술 등 대학별고사&gt;</b>            |
| ▶ 논술 등 대학별고사 폐지                      |
| <b>&lt;학생부 전형&gt;</b>                |
| ▶ 학생부 관련 전형 대폭 확대(※ 전체 모집인원의 80% 수준) |

### ■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등급만 적용

- 학생부의 영향력과 신뢰도 향상, 과도한 대학서열의 완화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수능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하고, 애초의 취지대로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위상을 정립
  - 중위권 대학까지는 수능을 여전히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위권 대학은 2~3배수 정도를 선발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학생부 등을 통해 선발

### ■ 논술 등 대학별고사 폐지

-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3년 동안 누적된 학교 논술과 수행평가 등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선
  -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은 대입전형의 운영 원칙을 정부, 대학, 고교, 시민사회 등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미 제안

#### <대입전형 운영의 기본 원칙>

- ☞ 대학은 전형자료를 얻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학교 밖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 ☞ 대학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결과와 고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인재선발 철학에 따라 '읽고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 **학생부 관련 전형 대폭 확대**


- 대입전형은 궁극적으로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고교 3년 동안의 누적된 결과물인 학생부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
- 수능이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빈 자리를 학생부 관련 전형이 대신

☑ **<3단계> 개선 방안이 지향하는 각 대입전형의 비중**

| 수능전형 | 대학별고사 | 학생부종합전형 |        |
|------|-------|---------|--------|
|      |       | 교과      | 교과+비교과 |
| 20%  | -     | 50~60%  | 20~30% |

※ 대학에 따라(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성적은 2~3배수 선발을 위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학생부 관련 전형을 통해 선발

**마무리하며 :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

이번 발제의 주제는 다시 개천에서 용 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용을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을 모두 줄 세우고 앞에서부터 잘라서 등급을 매기며 성공을 부여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왔다. 그 가운데 소수의 용이 있었지만, 다수의 이무기는 조용히 사라져 갔다. 이제 이와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우리는 심각한 미래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초고령화 사회까지 접어든 저출산 국가인 우리는,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사회를 지탱시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sup>1)</sup>

오 찬 호 박사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

지금세대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 환경에 처한 지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건 구글 검색 몇 분이면 가능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공인중계소 앞에서 한번이라도 머뭇거리 보았다면 ‘달라짐’을 느껴야함은 당연하다. 일례로 1991년에 5500만원 했던 분당의 아파트가 지금은 5억 5천만 원이다.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여러 논의를 뽑아낼 수 있다. 첫째, 집을 마련한다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의 등장이다. 10년 바짝 모으면 가능했던 시대와 20년을 바짝 모아도 불가능한 시대는 결코 같은 시대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몸만 피곤할 뿐이다. 둘째, 아파트가 의미 있는 재테크가 불가능해진 시대다. 아파트 가격이 과거처럼 오를리 없다. 그러니 열심히 산다고 자산증가폭이 동일할리 없다.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 되는 시대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같은 청년세대‘안’에서의 균열이 과거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그렇게 가난했다던 시대에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는 말이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N포세대란 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중 가장 대표적 ‘삼포’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다. 무슨 수영장 딸린 3층 저택을 구입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24평짜리 아파트도 가격에 입이 떡 벌어진다. 그런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주거권’을 쉽게 확보한다. 누구는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몇 십 년간 아등 바등 거리는데 누구는 ‘몇 십 년’을 시간 절약 한다. 그러니 이들의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다. 잘 사는 집안의 자녀가 크루즈 세계여행을 가는데 누구는 못 간다면 이는

1) 전채구절은 “기성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와 별반 관계없이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이며 장하성 교수의 말이다. 출처는 본문 안에서 밝혔다.

불평등이긴 하지만 사회문제까지는 아니다. ‘세계여행’이 보편적 인간의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이 수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정상이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주 40시간을 일하면’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가?

## 그때는 그걸 묻지 않았다

시간대가 다른,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달랐던 가정에서 살았던 A, B 이야기를 할까 한다. 이야기는 과거와 다른 상황에 처한 지금의 청년세대의 실상,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 안에서의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 내용을 미리 말하자면 A보다 부유한 가정에 살았던 B가 다른 이유도 아닌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부모를 ‘끊임없이’ 원망하게 된 사연에 관한 거다. 먼저 과거에 살았던 A다. A는 지방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아버지는 A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앞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떡볶이를 평생 파셨다. 고로 A는 힘겹게 살았다. 과외는커녕 학원조차 맘 편히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A는 개의치 않았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본인이 약삭같이 한다면 대학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A는 ‘성문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 사학명문이라 불리는 지방의 한 대학으로 진학했다. 지금은 ‘지잡대’라면서 조롱의 대상이 된 대학이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 ‘대학서열’의 상층부 학교, 이른바 ‘인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것은 A에게 약간 아쉬울 뿐이지, 인생의 ‘발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시켜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배적’이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한 후 가정형편상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A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교 앞 호프집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서빙을 하는 일이었다. 이는 곧 학점관리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A는 평균 3.0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B학점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니 학업성적이 탁월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업과정에서 이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왜 학점이 이 정도죠?”라고 묻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힘든 상황과 이것이 야기된 이유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 A의 취업이력서는 단출 했다. 엄연히 말해 평균 B학점으로 졸업한 대학의 학위증은 당시로서 결코 초라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 시절, 영어성적과 자격증은 보유한 사람만 적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었다. “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토익을 공부하는 거야?”라는 눈총을 받았던 친구 몇몇만 남들 하고 다른 어학능력을 이력서에 기재했는데 이들은 실제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희소한 자리로 진출했다. 그러지 않은 곳에서 일할 사람에게 영어능력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A는 이력서의 자격증 칸에 군대에서 취득한 ‘태권도 1단’과 ‘운전면허’를 적었고 무난하게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A의 부모는 자식이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이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다. A는 대학에 입학한 후 취업할 때까지 부모님께 딱 한번 손을 벌렸다.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중에 갚아드리겠다’면서 받은 5만원이 전부다. 이 ‘나중’도 취업의 공백기가 없었기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학입학과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도움이라곤 받아 본 적이 A는 지금에도 부모님을 늘 공경한다. ‘날아주고 하루 세끼 밥 굶기지 않으면서 길러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전전긍긍한다. A는 부모로부터 ‘하루 세끼’ 밥 얻어먹는 것조차 대학을 입학한 다음은 그마저도 스스로 해결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자녀의 역량’을 과거에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쉽게 말해, 비행기 표 살 돈도 없는 가정이라도 ‘어학연수’를 취업의 기본으로 묻는 시대가 아니라면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개인이 처한 ‘가난’은 마음먹기에 따라 극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설사 가난이 개인의 삶을 제약하더라도 감당할만한 수준의 사회였다. 나는 이 시기를 ‘좋았다’라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지금이 이때보다 ‘더’ 나빠진 건 분명하다.

##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다

B 이야기를 해 보자. B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이며 어머니는 9급 공무원이다. B 가족은 서울 끝자락에 있는 23평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다. 말이 끝자락이지 시세가 5억이다. 두말할 것 없이 B가족은 ‘중산층’이다. B는 흔히 하는 말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유년시절을 보냈다. A와 비교한다면 단연코 풍족했다. A는 목욕탕에서 독학했다는 수영을 B는 아파트 앞 유소년스포츠센터에서 무려 3년간 배웠다. A는 사교육이란 것을 고3때 시험을 앞두고 수학학원 3개월 다닌 게 전부였지만 B에게 사교육은 성장과정의 일부였다. B의 부모는 변호사, 의사 집안의 자녀처럼은 아니더라도 또래 평균치 정도는 투자했다. A는 유치원 때부터 집을 들락날락거

리는 학습지도교사를 만났고 과학캠프, 영어캠프도 꼬박꼬박 참가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터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래서 ‘더 비싸다는’ 학원도 다녔다. 대학을 입학해서도 B는 A와는 차원이 다른 호화를 누렸다. 등록금은 부모님이 책임졌고 졸업할 때 까지 매달 50만원의 용돈도 받았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투자를 받으면 자란 B, 그는 A보다 ‘더’ 부모에게 감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다. B는 오래전부터 ‘부모의 지원 부족’이 늘 불만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는 반복 그리고 누적되어 이제 B는 자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를 ‘능력 없다’면서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B가 부모를 원망하게 된 시기는 특목고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부터였다. 중학교 때 나름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던 B는 3학년이 되어서 외고 진학을 희망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퍼펙트 하지 않으면’ 외고입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B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외고진학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B가 다닌 학원의 ‘일반부’보다 수강료가 두 배 이상 비싼 ‘특목고 진학 특별반’을 다니고 있었고 별도의 과외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해외유학 대비반’을 다녔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각종 경시대회 수상, 입이 떡 벌어지는 영어 공인점수 성적 등은 기본이었다. 이런 업적(?)들은 입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지만,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개인의 경쟁력을 올려준다.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 온 이들도 수두룩했다. 방학 때 다녀 온 사람, 방학‘마다’ 다녀 온 사람, 아예 그쪽에서 학교를 한 학기, 두 학기를 다녔다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생애 처음으로 ‘가정형편’을 타했다. “왜 나는 어릴 때 외국에 안 보내줬어!”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부모는 가슴이 먹먹하다. 설마, 중학교 때 외국에 안 보냈다고 ‘부모 노릇’ 못한다는 소리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B는 좌절하기 않고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는 학교에서의 엉덩이사움만으로 성적이 보장되진 않는다. 몇 백 가지가 넘는 입시 전형방식, 학교별로 달라지는 가중치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눈 뜬 장님이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일반고 ‘안’에서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반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외고, 과학고를 ‘가는’ 시대의 일반고가 아니다.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서’ 특목고를 ‘가지 못한 자들이’ 모인 결핍의 공간이 바로 ‘일반고’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니

학생들은 일찍 감치 열패감에 사로잡혀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놓아버리고 선생들은 가르칠 의지를 상실한다. 이는 일반고 학업평균치를 낮춰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논술시험이라든가 수시전형의 다채로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수요가 원체 부족하니’ 굳이 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알아서’ 학원을 가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원이 어디 ‘평등’한가. 무상일리도 없지만 돈을 얼마만큼 내는지와 성과물은 비례한다.

B는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를 찾았다가 5일과정의 100만 원 정도의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하는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B는 당연히 이 학원을 다닐 수 없었고 원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50만원을 내고 3일 코스라도 수강할 수 있어서 ‘그나마’ 서울소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족보단 아쉬움이 크다.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전담 과외선생 밑에서 포트폴리오 작성에 열중하더니 ‘더’ 유명한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진학을 한 것을 알게 된 이상 배가 아픈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B는 다시 부모를 원망한다. 왜 자신의 부모는 허구한 날 “우리는 입시설명회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입시상담 받을 현금도 없단다. 이 해해주렴”이란 말을 달고 살았을까.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학을 진학한 B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했다. 하지만 대학은 ‘부모에 대한 원망’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가는 곳이었다. 취업, 아니 ‘대기업에 원서를 넣기 위한’ 기본 자격으로 필요하다는 9종 세트(학벌, 학점, 영어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그리고 마지막은 충격적이게도 성형수술)는 모두 ‘부모의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B는 그나마 부모의 도움으로 1년간 매달 22만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불할 수 있었기에 토익점수 800점을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었다. 어학연수는 여태 제주도에도 한 번 안 가본 B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자격증으로 태권도단증, 운전면허증은커녕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걸 묻는 시대도 오래 전에 끝났다. 향후 진로가 회계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 어필 차원에서 공인회계사(CPA)를 기본으로 취득하고 금융권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는 증권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 변액보험판매사 자격증 정도는 기본으로 보유해야 한다. 재무설계 전문 자격증인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도 가급적 취득해야 한다.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다고 합격보장이 되지도 아니다. 다 갖추고도 백수인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이 외중에 공모전을 챙겨야하고 봉사활동을 ‘업적화’해야 한다.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평가하니 봉사활동도 혹시나 꼬



투리 잡힐 ‘야학교사’보단 ‘캄보디아 가서 집짓기 봉사’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 ‘돈’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학점 좀 관리하고 영어점수 높다고 해서 50만원 내고 ‘기업에 따른 적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검색 받은 자보다 ‘뛰어난’ 글을 쓰긴 어렵다. 운 좋게 서류전형에 합격해도 취업전문학원에 100만원을 지불하고 ‘압박 면접’ 여행연습을 한 경쟁자를 이기긴 어렵다. 이 모든 것은 돈과 시간의 문제요, 고로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모‘탓’을 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부모님이지만 시대는 완전히 변했다. 면접 때 영향을 주는 ‘첫인상’에도 부모의 존재가 개입된다. 인상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취업의 ‘기본’이 되어버려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실제 발생하니 취업준비생들은 이마저도 경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외모’는 노력으로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 과학(?)에 의지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졌고 이와 비례하여 부모의 돈은 자꾸만 호출된다.

지난 2004년 ‘스펙’이란 단어가 국립어학원 신조어가 될 때 등장한 취업세트는 고작(?) 3종이었다(학벌, 학점, 영어점수). 이 시절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나마 ‘고등학교 때 좀 더 투자하지 않은 것’, ‘대학 때 자신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것’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겠지만 지난 십년간 취업세트는 3배로 진화했다. 그만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 난지가 더 중요해졌다. 고난을 극복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일 수 있겠으나 그 임계치를 넘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란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B는 현재 졸업한지가 2년이 지났지만 취업하지 못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해볼까 하지만 집안형편이 그 정도가 아니라서 또 부모를 원망스러워 하고 있다. B는 부모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점 4.1로 졸업을 했지만 세상은 다른 것들도 요구했다.

##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행정기준으로는 명백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부모의 ‘중산층 정도에 불과한’ 재산 때문에 겪게 되는 삶의 좌절은 결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극도로 가난한 자들만의 경로였지만 이제는 가난하지 않게 자란 자들도 가난해지게 된 세상이다. 부모의 힘은 자녀의 삶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있어 언제나 중요한 변수였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막강해졌다. 앞서 등장한 B의 부모는 자녀의 대학재학 기간 4년간 등록금 4천만 원, 생활비 2천만 원을(그래봤자 한 달에 50만원도

되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 학원비 등을 제외하면 밥값, 교통비 수준에 불과함) 지원했지만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해 준 것 없는’ 부모일 뿐이다. 5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난이 죄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보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수많은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열심히 산다고 ‘엄청난 부자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빈곤하지 않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앞서 등장한 A가 그랬다. 그런데 이 참을만한 불평등이 참을만한 수준을 넘겨 버렸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개인의 여정이 다시금 ‘태어날 때의 조건’ 앞에 막혀버린다.

통계수치는 이런 변화를 그대로 드러낸다.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을 보면 “평생 노력을 하면 본인 세대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1.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10년, 100년이 아니라 불과 6년 사이에 그 낙하 폭이 상당하다는 것이다(2009년 35.7% → 2015년 21.8%). 이는 개인이 삶의 불안에 대한 공포를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생각해보니,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도의 상황과 “작년엔 재작년보다 엉망이었어. 그런데 올해는 더 나빠졌어”라고 말하는 경우는 전혀 같은 상황이 아니다. 후자의 개인들에게는 ‘그래도 나아지겠지’라는 긍정성이 없다. 이는 고스란히 ‘내 자녀 역시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나타난다. 2009년에는 48.4%가 그래도 자녀들은 노력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지만 2015년에는 그 수치가 31%로 줄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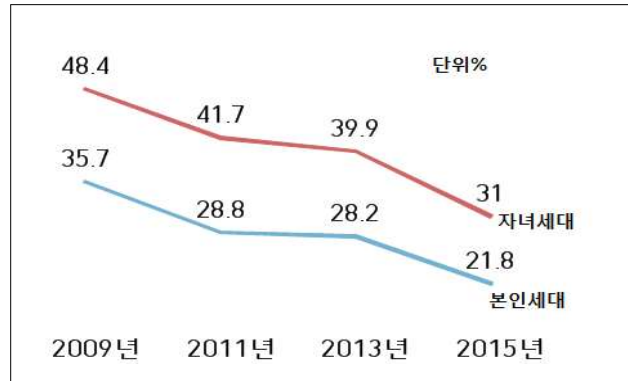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층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경우는 22.5%에 불과하다(보건사회연구소, 2014년 기준). 빈곤한 사람 4명 중 1명도 계층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에는 32.4%였는데 급락했다.<sup>3)</sup> 20~40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2012년 기준), 이들 중 한국사회를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다’ 응답한 경우가 64.4%였고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는 75.5%, ‘부모의 지위에 의해 자녀의 계층 상승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 사회이다’는 7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sup>4)</sup> 초중고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 성공이나 출세의 요인으로 ‘학벌과 연줄’을 꼽은 비

2) 한겨레. 2015. 11. 26. “국민 10명 중 2명만 “계층상승 가능.””

3) 국민일보. 2015. 1. 27. “빈곤탈출률 8년새 최저..‘희망 없는 사회.’”

4) 한겨레. 2012. 2. 13. “2040세대가 본 우리사회 “패자부활 기회 없다” 64%.”

율이 2006년 33.8%에서 2008년 39.5%, 2010년 48.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한국사회가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sup>5)</sup>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응답비율〉-통계청 2015 사회조사 결과

이런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이 되는 것도 힘들어지는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1990년만 하더라도 전체의 75% 중산층이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도전불가의 수준도 아니었다. 당시의 중산층 가구의 가장은 ‘고졸, 기혼, 평균가구원 4, 홀벌이’가 평균치였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38.2세였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중산층 비중이 전체의 67.1%로 과거에 비해 줄었다. 이것도 소득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실제 자신을 중산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체감 중산층’의 비율은 46.4%에 불과하다.<sup>6)</sup> 자격도 달라졌다. 대학졸업은 기본이며 중산층 평균 가구원 수도 3.4명으로 줄었다. 자녀를 두 명이상 양육하면 평범하게 살기조차 힘들어져다는 말이다. ‘맞벌이’가 기본이고 평균연령은 48세였다. 이는 40대가 넘어서도 중산층에 되지 못한 가구가 과거보다 늘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자격이 ‘상향조정’되었으니 한 사회의 빈곤탈출이 그만큼 힘들어졌음은 당연하다.

숫자들이 말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 사회는 일을 해도(working) 가난하다(poor). 그렇게 ‘지금’은 ‘과거’보다 더 지옥이 되었다. 지그문트 바우만, 리처드 세넷 등 여러 사회학자들이 이런 사회를 ‘생애에 대한 기획이 불가능’한 시대라 한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가 대학‘까지’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

5) 경향신문. 2014. 1. 3. “학부보들이 말하는 개인의 성공 출세 요인.”

6) 조선일보. 2013. 8. 17. “[분노의 중산층] [1] 쪼그라드는 중산층 ... 20여년새 7.7%p(75.4%→67.7%) 줄어.”

했다. 일자리를 구해도 일한만큼 벌지도 못하고 ‘정년’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정년을 다 채워도, ‘오래 살게 된 덕택에’ 노후불안에 대한 공포는 심해졌다.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의 특징이 한국에서는 ‘더’ 심하게 드러난다. 괜히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가장 잘 착륙했다’고 하겠는가. 흔히들 자본주의 사회를 ‘정글’로 비유한다. 그러나 탈출구라도 존재하는 곳과 이조차도 찾기 힘든 곳은 ‘같은’ 정글이 아니다.

다시 주택문제로 가 보자. 주택문제는 B와 같은 ‘중산층 가정’에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 20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3억 3천 849만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치 모아야 하는 수치다.<sup>7)</sup> (물론 그렇게 6년을 모아도 절대 살 수 없다. 그 사이 집값은 임금노동자의 소득인상분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지 않겠는가.) 자본주의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집값이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무슨 저택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24평형 아파트 전세 얻는데 저만한 금액이 드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그리고 저 금액도 서울의 평균일 뿐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쪽에는 24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8억이 넘는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쁜’ 수치가 ‘나빠지는 것’처럼 이 가격도 악화일로다. 2004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 5,432만원이어서 그래도 4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저축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다.<sup>8)</sup>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에서도 이 정도인데, 실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세가 아니라 ‘주택매입’을 기준으로 주관을 두드려보면 이걸 거의 절망이다. 소득분위를 5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인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1년에 평균 797만 4천 원 정도를 저축한다. 그렇게 27년을 성실히 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2억 1,677만원), 43년을 살면 수도권에서(3억 4,700만원), 그리고 59년을 살면 서울에서(4억 7,000만원) ‘평균’에 해당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sup>9)</sup> 어디 이것뿐인가. 검색 몇 번만 하면 불명예스러운 통계지표에서 독보적으로 ‘OECD 1위’를 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노력할 근거가 없고 도둑질이나 사기 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sup>10)</sup> 충분히 있음직한 일 아니겠는가.

7)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4.3년이,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3.4년이 걸린다.

8) 경향신문. 2015. 2. 15. “서울 전세가 3억 3849만원... 근로자 6년치 소득 모아야 전세 아파트 한 채 얻는다.”

9)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동녘. 253p.

10) JTBC. 2015. 1. 27. “다 해봤는데 가망이 없지..” 단허가는 ‘가난 탈출구.’ 뉴스에

## “왜 4년 만에 졸업을 하지?”라고 묻는 시대의 등장

지금의 청년세대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특이한 현상 하나를 이해해보자. 졸업을 안 한다는 뜻의 ‘NG족’(No Graduation)은 이미 보편적인 시사 용어가 되었다. 공교롭게도 영화촬영장에서 외쳐대는 “NG!”(No Good)와 발음이 같은데 원래사용시의 뜻과 너무나도 어울릴 정도로 NG족은 부정적인 세태를 대변한다. 지금까지 대학생활의 기간이 연장되는 지점이 사회적 관심이 된 것은 군대문제와 상관없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든지, 반수를(대학을 다니면서 수능재수) 선택하면서 야기되는 자퇴생의 증가 정도였다. 졸업논문을 쓰지 않거나, 영어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교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멀쩡한 학점 하나를 F처리해서 졸업조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졸업유예는 일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NG족이 2006년도 ‘올해의 신조어’로 여러 언론매체에 등장했을 만큼 졸업유예는 2000년대 중반이후의 ‘암울해진’ 대학생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2013년 12월 12일자 <한국대학신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관광위원회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대학별 졸업생 등록학기 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서울대도 피해갈 수 없는 ‘취업한파’ - 인문대 졸업자 절반이 10학기 이상 등록한 ‘5학년생’” 기사를 보자.

1. 올해 서울대 졸업자 3495명 가운데 10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의 비율은 34.1%(1192명)에 달했다. 이는 2009년 25.2%(979명)보다 5년만에 8.9%p나 증가한 수치다. 단과대별로 인문계열 ‘5학년생’ 비율이 자연계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인문대가 2009년 34.3%에서 2013년 49.8%로, 사회대가 30.6%에서 41.3%로, 경영대가 32.8%에서 46.7%로 급증했다. 반면 공대(29.2→28.0%)와 자연대(26.2→26.8%)는 ‘5학년생’의 비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 9학기 등록자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문계열 단과대학의 경우 거의 80%에 육박했다. 2013년 졸업자 가운데 9학기 등록자 비율은 법대(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대(77.9%), 경영대(77.4%) 순이었다. 공대(54.1%)와 자연대(48.7%)는 절반가량이 4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2. 29학기로 좁혀보면 전체평균이 59.7%이며 인문대, 경영대 등은 “남들 다 하니까” 유예한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자연대, 공대에서는 “아직 절반은 유예 안 해”라고 자조가 허락된다. 물론 이는 대학 전반적 풍토다. 이화여대는 53%, 연세대는 46%가 9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한다. 서강대의 경우 졸업자 중 유예자 비율이(2011년→2013년) 인문학부(42→57%), 사회과학부(42→50%), 경제학부(32→53%), 경영학부

(31→43%), 커뮤니케이션학부(40→63%) 등으로 확인되었는데<sup>11)</sup> 이런 수치들을 종합하면 전체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서울권 일부대학은 이미 유예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계열이 더 높은 이유는 당연히 취업문제가 타의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펙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데 복수전공으로 경영학 계열까지 선택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적인 시간 개념에서 8학기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120~130학점 중 100학점 정도를 전공과목으로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학점관리와 토익시험 응시 정도다. 재학기간 중 2~3학기 정도 가능한 휴학을 어학연수, (취업용) 봉사활동 등에 활용하 공모전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졸업유예’는 당연해진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5년 만에 졸업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했지만, 요즘은 4년 만에 졸업하면 ‘왜 4년 만에 졸업하지?’”<sup>12)</sup>라고 묻는 시대다. 고용정보원의 <2015년 4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보면 전체 대학생 중 휴학 없이 졸업한 사람은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69.1%는 휴학과 유예 등을 통해 어떻게든 졸업을 연기한다. 평균 졸업기간이 남자의 군복부 기간을 제외하고도 5.2년이다. 누구든지 평균 1.2년을 ‘더’ 대학을 다닌다. 사실상 ‘모든’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상당수’가 졸업유예를 하는 시대다.

##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졸업유예가 대수겠는가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이유를 추론하는 건 어렵진 않다. 일을 해도(working) 가난한(poor) 시대에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를 따져야하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비례하여 전체의 학력상승이 나타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적체된다. 투자한 비용을 고려하면 쉽사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없다. 이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다른 쪽’이 워낙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청년의 문제를 ‘예전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생애사적 위기의 차원에서 쉽사리 규정할 수 없다. “기성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와 별반 관계없이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 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sup>13)</sup> 지금은 엄청나게 사교육 받아 이름 있는 대학을 가서 학기를 초과하면서까지 취업을 준비한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11) 서강학보(2014. 9. 17). “대학은 5년제? 취업난에 서러운 인문계열.”

12) 조선일보. 2013. 12. 12. “서울대 人文大 '대학 5학년생(10학기 이상 등록)' 50% 육박”-조선일보 2013. 12. 12.

13) 장하성. 2016. 2. 19(한겨레). “기성세대는 자식들에게 물어봐라.”

문제를 바탕으로 ‘비정상화의 일상화’가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자.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대기업 노동자 임금대비 97%의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았다. 이것이 1994년에는 77%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60%까지 급락했다.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이니 대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기대할 순 없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감당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00만원이 경우와 180만원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을 가는 것이 곧 삶의 질이 추락됨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그런데 현재 전체 노동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sup>14)</sup> 일자리를 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0명 중 ‘2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단지 임금만 차별 받는 게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95%가 넘지만 중소기업은 64.1%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현재는 물론 노후까지 불안함을 예약하는 꼴이다. 유급휴가 역시 대기업은 93.4%가 혜택을 보았지만 중소기업은 44.4%만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sup>15)</sup> 휴가를 쓰는 만큼 월급이 깎이니 제대로 쉴 수도 없다. 2%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동조합 조직률을 볼 때<sup>16)</sup>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다. 쉽게 말해, 지금의 대학생들이 대기업을 고집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본능’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까지 고려하면 ‘대학생들의 졸업유예 전략’은 쉽게 이해된다.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 될 바에는 다른 기회를 엿보기 위해 ‘강의도 듣지 않으면서 대학에 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사회마다 여러 이유가 중첩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은 쉽사리 인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149만 7천원은<sup>17)</sup> 정규직 대비 55.8%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정부통계이고 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대비하여 절반도 되지 않는 49.9%의 급여를 받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하면 40%밖에 되지 않는다. 대기업 대졸신입사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20만원 받는 셈이다. ‘밥만 먹고 살라’는 뜻이다.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2002년도에는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7만 1천원을 받았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 다들 그랬는데, ‘더’ 나빠졌다. 그래서 노동자 중위계층 급여의 3분의 2 이하

14)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27p.

15) 한겨레(2015. 2. 22). “대기업 정규직 100원 받을 때…중소기업 비정규직 41원 받아.”

16)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143p.

17) 해럴드경제(2015. 5. 28).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사회보험 가입률 ↓”

로 급여를 받는 ‘저임금자 비율’도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정규직 1062만 명 중 저임금 종사자는 70만 명인데, 비정규직 노동자 868만 중 402만 명이 저임금 노동자다. 미래마저 어둡다.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OECD 16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2.4%에 불과해, 평균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으로 전환은 커녕 해고되기 일쑤다.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 3년 내 해고될 확률이 26.7%인데 이는 평균 16.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sup>18)</sup> 비록 비정규직이라도 ‘나중에’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해고될 가능성은 낮다면 대학생들은 졸업유예보다 ‘어디든 취업부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정규직에 비해 6분의 1 수준인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현실<sup>19)</sup>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풀릴 여지도 없다. 그러니 8학기가 끝나갈 때, 구직성과가 좋지 않으면 ‘취업준비생’ 신분을 더 늘려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봄직 하다.

불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가 ‘공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2010년 이후 4년간, 한국의 30대 공기업에서 정규직은 1.2%, 비정규직은 12.4% 증가했다.<sup>20)</sup>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고용의 풍토를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니 일반기업이 “더 이상 해고할 정규직이 없는 상황”<sup>21)</sup>인건 놀라운 일도 아니다.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지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데’ 졸업유예가 뭐가 대수겠는가.

## 의심하라! 그것은 신(神)이 선사한 사람의 권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제도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언급된 ‘나쁜 지표’들이 좋아져야 한다. 제도적 도움을 넓은 의미에서 정책이라고 본다면 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겠지만 그 정치인이 ‘대변하는’ 민심은 결국 개인이 평소 어떤 여론을 생산하기 위 노력 했는가와 무관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늘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한국사회가 만만치 않다. 특히! 종교는 이를 무슨 죄악처럼 여긴다.

18) 한겨레(2014. 10. 6). “[단독]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19) 헤럴드경제(2015. 5. 28).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사회보험 가입률 ↓”

20) 경향신문(2015. 6. 29). “30대 공기업, 정규직 덜 뽑고 계약직만 늘렸다.”

21) 조계완. 2012. 『우리시대 노동의 생애: 자본, 시장 그리고 노동』. 엘피. 347p.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신이 직접 만드셨다는) 인간의 ‘자격’이다. 인간은 침팬지와(심지어 ‘쥐’하고도) 유전자의 99%가 흡사하다. ‘다른’ 1%는 바로 여성의 유무다. 여성은 언어를 만들고 추론능력을 만들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래서 인간만이 ‘공동체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능을 억제한다. 그렇기에 인류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생물학적 진화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속도로 사회적 진화를”<sup>22)</sup> 할 수 있었다. 사회학자 김찬호는 『사회를 보는 논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특징을 설명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지적인 호기심이 매우 강렬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알고 싶어 한다. (...) 인간은 주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인간 진화의 비결이다. (...)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삶과 사물의 이치를 되묻는 작업만이 아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되고 내게 던져진 질문 그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단계로도 나아가야 한다. 오답도 문제지만 오문(誤問), 즉 잘못 던져진 질문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내게 던진 질문에 대해 과연 그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질문일까하고 물음표를 달아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질문도 우리를 구속하지만, 스스로 던진 질문 가운데도 잘못 던져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 질문 자체에 질문할 수 있는 힘, 그 지적인 에너지로 우리는 생각과 삶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다.<sup>23)</sup>

예를 들어, ‘불’이란 걸 이해해 보자.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고 피한다. 본능에 충실한 반응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영리하게 사용했다.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니 ‘불’은 무궁무진한 효용이 있었다. 음식에 ‘가열’하면서 더 건강해졌고,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니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인간은 ‘불’을 적의 위협을 막아내는 도구이자 공부를 위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으로 응용했다. 때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서로간의 갈등을 씻기도 하고 ‘촛불시위’ 때는 강력한 사회적 저항의 무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불’을 아주 거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보자. 인간은 그 고정관념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경우

22) 이도흠. 2014. 4. 20(한겨레). “[세상 읽기] 3류 대한민국의 진화 방안.”

23) 김찬호. 2008. 『사회를 보는 논리(개정판)』. 문학과학사. 37-38; 40p.

에 따라서는 ‘깨부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인간을 “신이 정해진 운명에 도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유일한 동물”<sup>24)</sup>이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 안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성장통’을 바탕으로 인류는 전진한다.<sup>25)</sup>

‘확신하지 않는 자세’를 인간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집단사고’(group thinking)는 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Irving Janis)의 개념이다. 재니스는 미국의 케네디 정부가 쿠바의 피그만을 무력 침공했다가 혼쫓난 사건을 통해 ‘아무리 지성들이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결정은 ‘멍청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은 자기 바로 앞에서 사회주의 깃발을 보란 듯이 꽃고 있던 쿠바가 눈에 가시거리였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쿠바를 어떻게든 해결(?)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CIA는 무력으로 침공하여 내부갈등을 통한 체제개혁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물론 쉽사리 실행에 옮길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젊음’을 무기로 한 ‘케네디 정부’는 자신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이 카드를 사용하기로 한다. 백악관 회의실에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피그만 침공’을 실행에 옮긴다. 이들은 ‘우리처럼 잘 나가는 집단에서’ 오류를 범할 리 없다는 ‘극단적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한다 (1961년). 작전에 참가한 1400명 중 1200명이 ‘생포’되었고, 미국정부는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쿠바에 5,300만 달러 수준의 물자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작전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미국정부는 만약 문제가 될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 1400명의 요원들을 ‘쿠바망명자’로 구성했다. 여기서 일차 문제가 발생했다. 과테말라에서 훈련을 한 이들은 시작부터 불안해했다. ‘왜 미국인들은 여기에 없는 거지?’라는 지극히 당연한 의문이 등장했고 이는 ‘잘못되면 우리 모른 척 하는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졌다. 작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다수가 즉시 ‘항복’을 선택한데에는 이런 불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실수는 미국정부가 ‘쿠바’라는 국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쿠바’는 엄연한 ‘국가’의 틀을 탄탄히 갖춘 나라다. 이런 ‘쿠바’를 사실상 비(非)정예요원을 투입시켜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었다. 쿠바가 무슨 ‘부족단체’란 말인가? 그리고 ‘무려’ 1400명을 투입시키면서도 내부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 그리고 ‘고작’

24) 전우용. 2015. 2. 16(한겨레). “[전우용의 현대를 만든 물건들] 치약.”

25) 조효제. 2014. 4. 2(한겨레). “<조효제의 인권오디세이> 권리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나.” 다음 구절에서 참조했다. “인간사회가 전진할 때 갈등과 긴장이 없을 수 없다. 권리 간 충돌은 인류 진보의 성장통인 셈이다.”

1400명을 가지고 무력침공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한 명의 독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답게 케네디정부는 열심히 토론을 했다. 그러나 ‘결속력이 너무나 강한 것’이 문제였다. 정당한 비판이 ‘우리가 과연 실수할 것 같아?’라는 반론에 막히고 합리적 의심을 ‘너 겁쟁이구나?’라는 조롱하는 곳에서 ‘옳은 결정’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집단사고’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비교되는데, 후자는 다수의 의견이 ‘모여’ 보다 지혜로운 결과물이 창출됨을 뜻한다. 하지만 집단이 모였다고 ‘지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위한 과정의 철학이 어떤가에 따라 그 결과는 최악일 수 있다.

당신이 한국인이자라면 이 문제를 더 무게감 있게 이해해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결속력이 높을수록 집단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한국사회는 이 ‘결속력’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매우 신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가 그렇다!)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고자질쟁이’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결속력’에 대한 과잉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당연한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한국처럼 ‘미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가 ‘이기주의’로 오해되기 쉽다. 결국 ‘논리’와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가치’가 늘 추종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회는 ‘집단사고’는 구조적으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비판적 사고’를 일단 ‘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으로 고려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추후개념으로 미루게 될 때, ‘현실성’이라는 덩어리는 집요하게 개인의 일상을 지배한다. 그 결과는 ‘영원히’ 먹고사는 문제에만 개인을 집중시키는데,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설사 추후에 ‘여유가 있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가 되면 ‘비판’은 매우 어색한 개념이 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 그건 ‘이성’에 충실한 지극히 인간의 자격이자, 나아가 자신이 동물과 다른 인간임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오늘의 지혜가 내 일의 어리석음이 되는 일은 비일비재”<sup>26)</sup>하니까 언제나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길 바란다 (Suspend Your Belief!). “인류가 성인이라 칭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혁명성”<sup>27)</sup>이었음을 기억하자. 신이 인간을 그렇게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셨다.



26) 스티븐 브라이어스. 2014. 『영터리 심리학: 18가지 위험한 심리 법칙이 당신의 뒤통수를 노린다』. 동양북스. 270p.

27) 김선우. 2015. 3. 18(한겨레). “<김선우의 빨강> 종교와 혁명.”

## 노동 양극화 현황,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

우 상 범 박사 | 평화누리 실행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1. 서론

2012년 12월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격차(또는 양극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격차 문제가 어떠한가?’의 질문에 심각하다는 답변이 8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매우 심각하다(47.2%), 심각하다(42.2%)). 또한 ‘어느 분야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23.6%)가 1위에 올랐고, 이어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17.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14.6%), 교육기회의 양극화(13.5%), 학벌에 따른 취업기회의 양극화(9.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31.0%)’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양극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이다. 그런 양극화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고 양극화 요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해법은 찾기 어렵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더욱 그렇다.

본 발제문은 한겨레신문사에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노동분야에서 정규직-비정

규직간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발제문은 크게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은 국내외의 다양한 노동관련 지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분야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 3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장은 노동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및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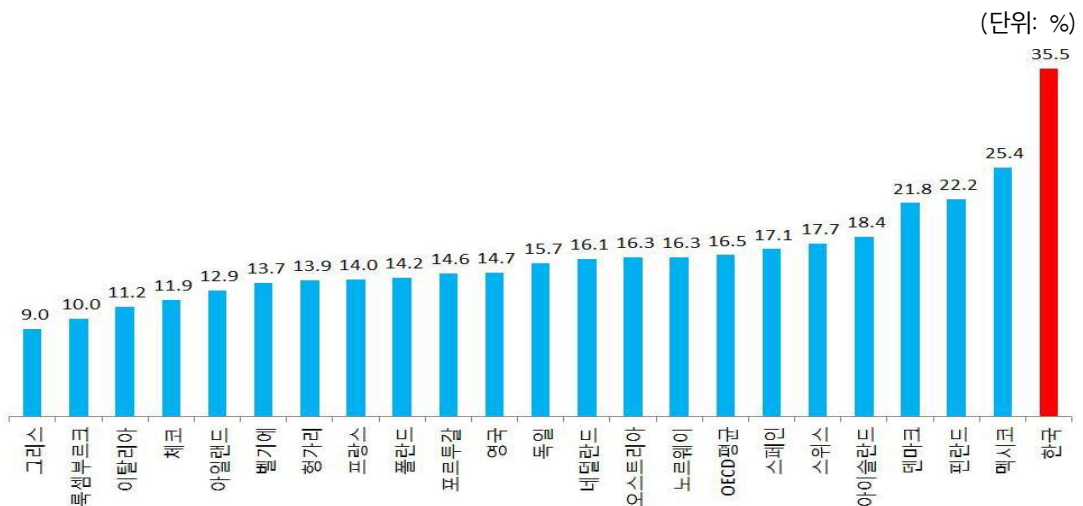
## II. 국내외 노동의 양극화 현황

### 1. 고용안정

근속연수는 고용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LO와 OECD 등 노동 관련 국제기구들은 고용안정의 지표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김유선, 2016).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고용이 안정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5.1%로 OECD 회원국 평균 18.1%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3명중 1명은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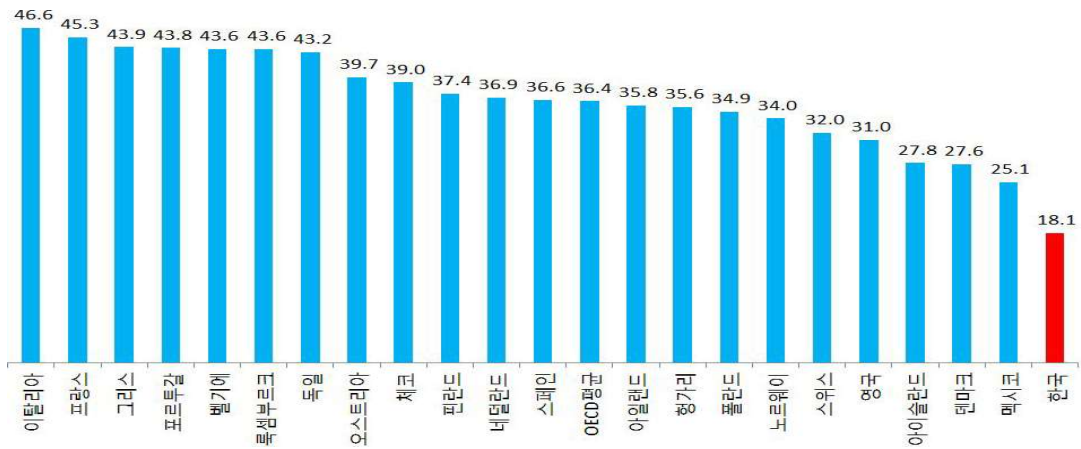


자료: 유병홍 외(2013)

둘째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한국이 18.1%로 22개 OECD 회원국 평균 36.4%의 절반수준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46.6%)이고 이어 프랑스(45.3%), 그리스(43.9%), 포르투갈(43.8%), 벨기에(43.6%), 룩셈부르크(43.6%), 독일(43.2%) 등은 장기근속자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국가이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201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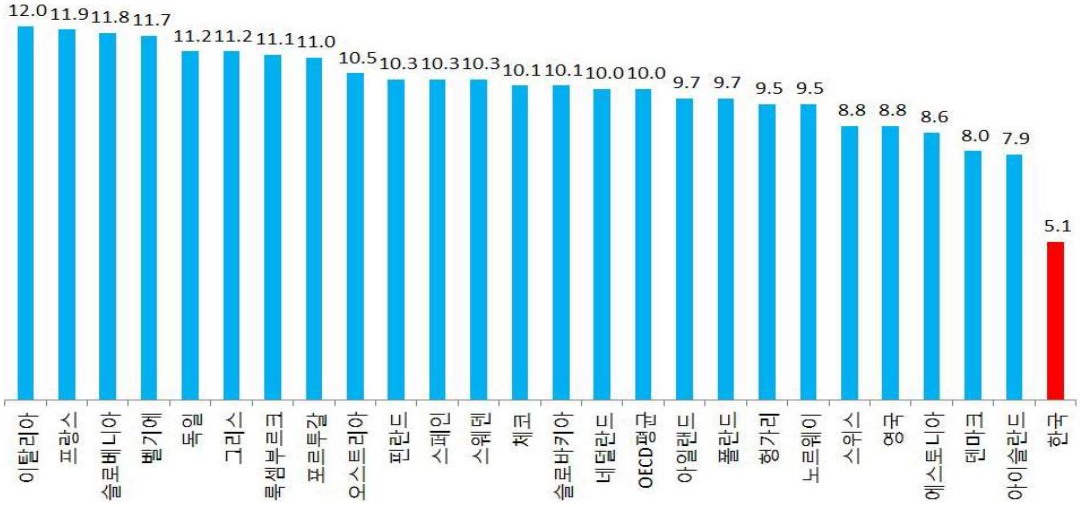


자료: 유병홍 외(2013)

셋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5.1년으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10년의 절반수준이다. 이탈리아가 12년으로 가장 길고 이어 프랑스(11.9년), 슬로베니아(11.8년), 벨기에(11.7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평균 근속년수(2011년 기준)

(단위: %)



자료: 유병홍 외(2013)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고용이 불안정한 국가에 속한다. 이런 통계는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의 평균 근속년수는 7년 3개월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년 4개월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OECD 평균 근속년수 10년보다 낮다.

<표 1>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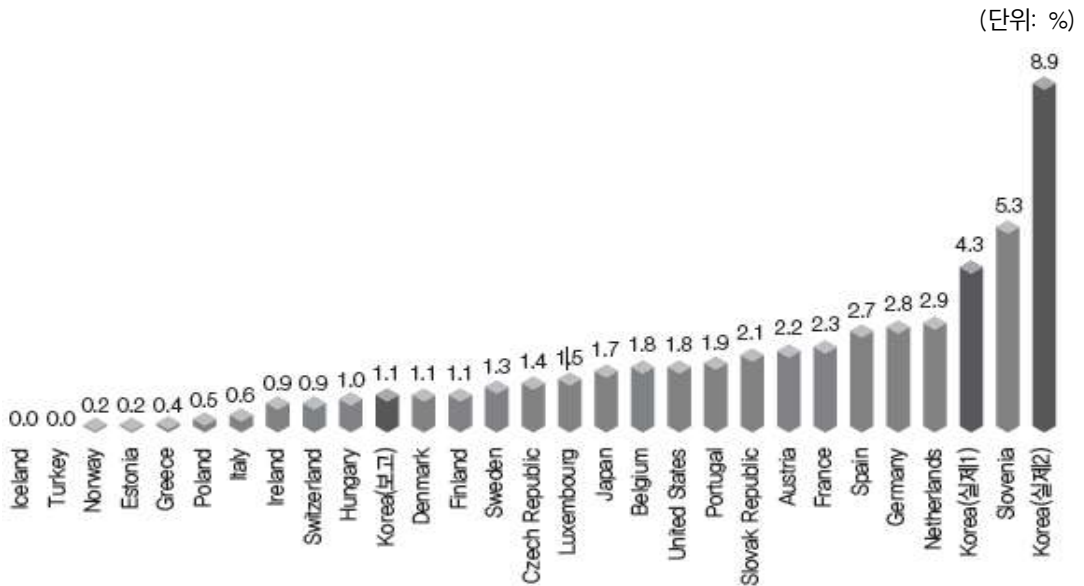
|       | 2014. 8 |        |         |       | 2015. 8 |        |         |       |
|-------|---------|--------|---------|-------|---------|--------|---------|-------|
|       | 평균 근속기간 | 비율 (%) |         |       | 평균 근속기간 | 비율 (%) |         |       |
|       |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년 이상 |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년 이상 |
| 임금노동자 | 5년 7개월  | 32.3   | 21.5    | 46.1  | 5년 8개월  | 32.6   | 21.0    | 46.4  |
| 정규직   | 7년 1개월  | 21.6   | 21.7    | 56.7  | 7년 3개월  | 20.9   | 21.2    | 57.9  |
| 비정규직  | 2년 6개월  | 54.8   | 21.1    | 24.1  | 2년 4개월  | 56.9   | 20.5    | 22.5  |

자료: 통계청

## 2. 비정규직 규모

고용노동부가 OECD에 보고한 순수 파견근로 비율은 2012년 3월 1.1%로 OECD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용역노동자를 합치면 4.3%로 슬로베니아(5.3%) 다음으로 높고,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된다(김유선, 2016).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은 모두 비정규직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합친다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년 미만 단기근속자들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림 4] 파견근로자 규모(2012년 기준)



자료: 김유선(2016)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는 총 19,312천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13,041천명(67.5%)이고 비정규직은 6,271천명(32.5%)를 차지한다.<sup>1)</sup> 즉, 10명 중 3명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임을 보여준다.

1) 반면, 김유선(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8,229천명이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44.7%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이는 비정규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2>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단위: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임금노동자 | 14,968<br>(100.0) | 15,351<br>(100.0) | 15,882<br>(100.0) | 16,104<br>(100.0) | 16,479<br>(100.0) | 17,048<br>(100.0) | 17,510<br>(100.0) | 17,734<br>(100.0) | 18,240<br>(100.0) | 18,776<br>(100.0) | 19,312<br>(100.0) |
| 정규직   | 9,486<br>(65.4)   | 9,894<br>(64.5)   | 10,180<br>(64.1)  | 10,658<br>(66.2)  | 10,725<br>(65.1)  | 11,362<br>(66.7)  | 11,515<br>(65.8)  | 11,823<br>(66.7)  | 12,295<br>(67.4)  | 12,699<br>(67.6)  | 13,041<br>(67.5)  |
| 비정규직  | 5,483<br>(36.6)   | 5,457<br>(35.5)   | 5,703<br>(35.9)   | 5,445<br>(33.8)   | 5,754<br>(34.9)   | 5,685<br>(33.3)   | 5,995<br>(34.2)   | 5,911<br>(33.3)   | 5,946<br>(32.6)   | 6,077<br>(32.4)   | 6,271<br>(32.5)   |

자료: 통계청

연령대별 비정규직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50-59세가 21.5%로 가장 높고, 이어 60대 이상(21.0%), 40-49세(20.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39세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10대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은 40대 이상의 중고령자들임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천명,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비정규직 | 5,483    | 5,457 | 5,703 | 5,445 | 5,754 | 5,685 | 5,995 | 5,911 | 5,946 | 6,077 | 6,271 |      |
| 연령   | 15 - 19세 | 3.1   | 2.6   | 2.8   | 2.5   | 2.5   | 2.6   | 2.7   | 3.3   | 2.9   | 3.0   | 3.0  |
|      | 20 - 29세 | 22.6  | 20.9  | 20.1  | 20.2  | 19.1  | 18.8  | 18.1  | 17.2  | 17.3  | 17.9  | 17.8 |
|      | 30 - 39세 | 25.0  | 25.4  | 24.2  | 23.2  | 20.5  | 19.5  | 19.4  | 18.7  | 17.9  | 17.2  | 16.2 |
|      | 40 - 49세 | 24.9  | 24.3  | 24.5  | 24.5  | 24.5  | 23.8  | 23.6  | 23.0  | 22.2  | 21.3  | 20.4 |
|      | 50 - 59세 | 14.6  | 15.6  | 16.8  | 17.4  | 18.1  | 19.7  | 20.2  | 20.6  | 21.7  | 21.1  | 21.5 |
|      | 60세이상    | 9.9   | 11.2  | 11.6  | 12.2  | 15.2  | 15.6  | 16.0  | 17.2  | 17.9  | 19.5  | 21.0 |

자료: 통계청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459만명 중 비정규직은 182만명(39.5%)이 종사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19.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2만명(20.0%)이다.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고,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명(7.0%),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명(30.7%)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66.7%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의 상당부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0대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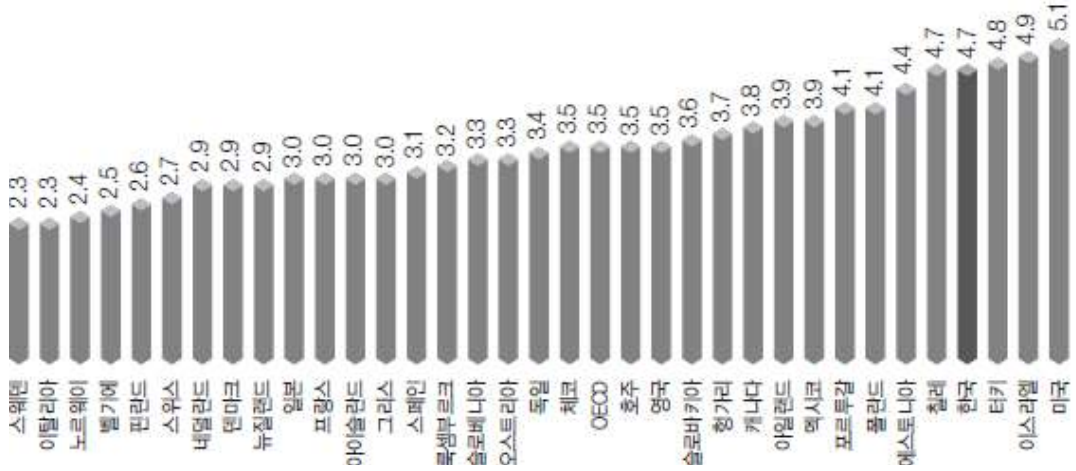
|          | 기업 수 (개) | 노동자 수 (천명) | 정규직 수 (천명) | 비정규직수(천명) |       |       |       | 비정규직 비율(%) |       |       |       |
|----------|----------|------------|------------|-----------|-------|-------|-------|------------|-------|-------|-------|
|          |          |            |            | 전체        | 직접 고용 | (기간제) | 간접 고용 | 전체         | 직접 고용 | (기간제) | 간접 고용 |
| 삼성       | 40       | 396        | 255        | 141       | 17    | 17    | 124   | 35.6       | 4.4   | 4.3   | 31.2  |
| 현대자동차    | 28       | 226        | 146        | 80        | 15    | 15    | 65    | 35.5       | 6.6   | 6.6   | 28.8  |
| 에스케이     | 30       | 96         | 69         | 27        | 4     | 4     | 23    | 28.0       | 4.4   | 4.0   | 23.6  |
| 엘지       | 28       | 160        | 135        | 25        | 5     | 4     | 21    | 15.7       | 2.8   | 2.6   | 12.9  |
| 롯데       | 25       | 121        | 64         | 58        | 26    | 24    | 32    | 47.5       | 21.2  | 20.0  | 26.3  |
| 포스코      | 15       | 64         | 32         | 32        | 4     | 4     | 28    | 50.2       | 6.2   | 6.2   | 44.0  |
| 지에스      | 17       | 46         | 20         | 26        | 9     | 7     | 17    | 56.1       | 19.8  | 15.4  | 36.3  |
| 현대중공업    | 8        | 111        | 37         | 74        | 3     | 3     | 71    | 66.7       | 2.8   | 2.8   | 63.9  |
| 한진       | 11       | 45         | 28         | 17        | 3     | 3     | 14    | 38.6       | 7.0   | 7.0   | 31.6  |
| 한화       | 14       | 36         | 26         | 10        | 4     | 4     | 6     | 27.6       | 11.8  | 11.6  | 15.8  |
| 10대 재벌   | 216      | 1,301      | 811        | 490       | 90    | 86    | 400   | 37.7       | 7.0   | 6.6   | 30.7  |
| 고용형태공시대상 | 3,233    | 4,593      | 2,778      | 1,815     | 898   | 842   | 918   | 39.5       | 19.5  | 18.3  | 20.0  |

자료: 김유선(2016)

### 3. 임금 불평등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은 2013년 4.7배로 미국,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지난 10년(2004~2014년) 동안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을 계산하면, 월 임금 기준으로는 평균 5.2배,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5.1배로 OECD 제출 자료보다 더 높게 계산된다.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임금 불평등 현황(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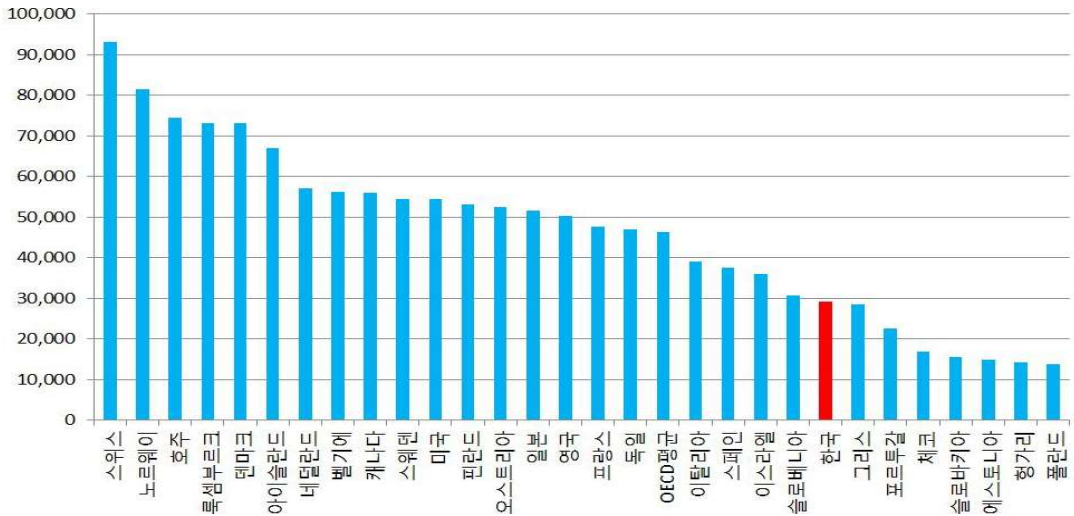


자료: 김유선(2016)

2011년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은 2만 9,053달러로 OECD 평균 이하이며 전체 OECD 29개 회원국 중 22위에 해당된다. 스위스(9만 3,235달러), 노르웨이(8만 1,475달러), 호주(7만 4,512달러), 룩셈부르크(7만 3,203달러), 덴마크(7만 3,032달러)가 가장 높고, 미국(5만 4,450달러)은 11위, 일본(5만 1,613달러)은 14위를 나타낸다.

[그림 6] 연간 임금총액(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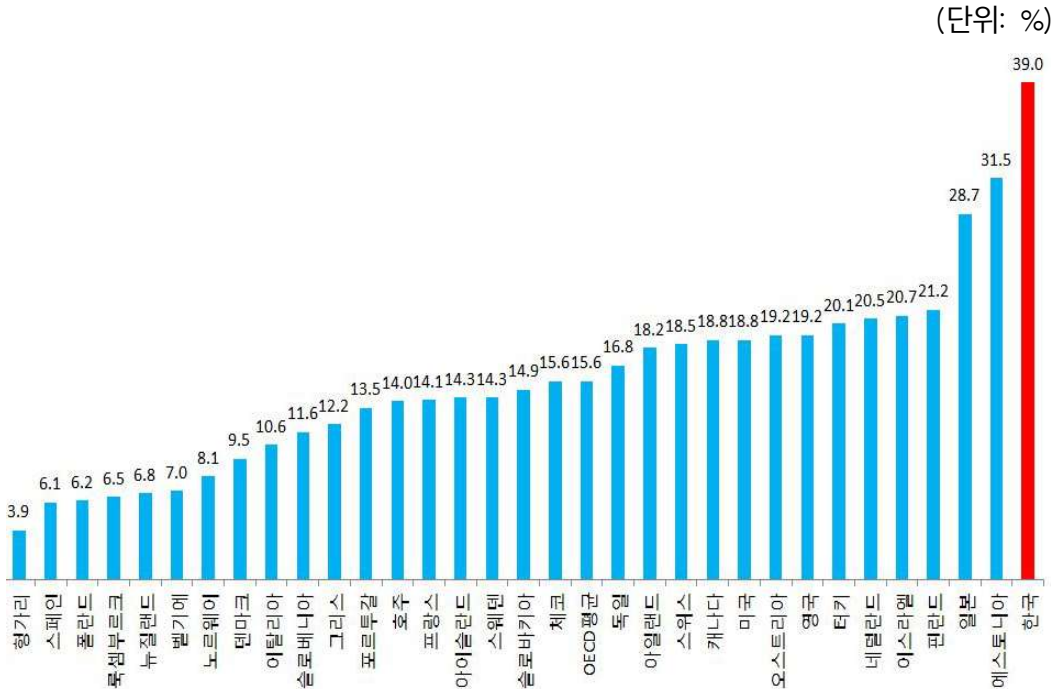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유병홍 외(2013)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5.6%며, 헝가리(3.9%), 스페인(6.1%), 폴란드(6.2%), 룩셈부르크(6.5%), 뉴질랜드(6.8%), 벨기에(7.0%), 노르웨이(8.1%), 덴마크(9.5%)는 10%미만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낮다.

[그림 7] 성별 임금격차 (2010년 기준)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408만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은 206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은 208만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은 120만원 수준이다. 비율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라고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0.6로 보여준다. 아래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업체규모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          | 월임금총액(만원) |      |     | 임금격차1(%)        |      | 임금격차2(%)      |      |
|----------|-----------|------|-----|-----------------|------|---------------|------|
|          |           |      |     | 300인 이상 정규직=100 |      | 각 규모별 정규직=100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노동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1~4인     | 208       | 120  | 138 | 51.1            | 29.4 | 100.0         | 57.4 |
| 5~9인     | 242       | 139  | 184 | 59.4            | 34.0 | 100.0         | 57.2 |
| 10~29인   | 273       | 154  | 221 | 66.9            | 37.9 | 100.0         | 56.6 |
| 30~99인   | 296       | 179  | 258 | 72.6            | 44.0 | 100.0         | 60.5 |
| 100~299인 | 304       | 193  | 279 | 74.5            | 47.4 | 100.0         | 63.6 |
| 300인이상   | 408       | 206  | 379 | 100.0           | 50.6 | 100.0         | 50.6 |
| 전규모      | 299       | 147  | 231 | 73.4            | 36.1 | 100.0         | 49.1 |

자료: 김유선(2016)

한겨레신문이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자들의 평균 보수는 23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직원들의 평균 보수 6,700만원보다 35배, 최저임금 1,300만원보다 180배 많은 액수이다. 경영자와 일반직원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한화로 50.1배이며, 이어 한진(49.5배), 현대차(46.9배)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10대 대기업 경영자 및 일반직원 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배)

|           | 연봉(백만원) |       |         | 격차(배)       |              |              |
|-----------|---------|-------|---------|-------------|--------------|--------------|
|           | 최저 임금   | 일반 직원 | 최고액 경영자 | 일반직원 / 최저임금 | 최고액 경영자/최저임금 | 최고액 경영자/일반직원 |
| 한화(4)     | 13      | 73    | 3,670   | 5.6         | 280.8        | 50.1         |
| 한진(6)     | 13      | 47    | 2,310   | 3.6         | 176.8        | 49.5         |
| 현대차(10)   | 13      | 82    | 3,840   | 6.3         | 293.8        | 46.9         |
| 엘지(9)     | 13      | 66    | 2,350   | 5.1         | 179.8        | 35.6         |
| 삼성(18)    | 13      | 74    | 2,550   | 5.7         | 195.1        | 34.3         |
| 현대중공업(3)  | 13      | 71    | 2,130   | 5.4         | 163.0        | 29.8         |
| 롯데(9)     | 13      | 48    | 1,340   | 3.7         | 102.5        | 28.0         |
| 에스케이(10)  | 13      | 72    | 1,810   | 5.5         | 138.5        | 25.0         |
| 지에스(5)    | 13      | 51    | 1,250   | 3.9         | 95.7         | 24.4         |
| 포스코(4)    | 13      | 71    | 1,610   | 5.4         | 123.2        | 22.6         |
| 10대재벌(78) | 13      | 67    | 2,350   | 5.1         | 179.8        | 3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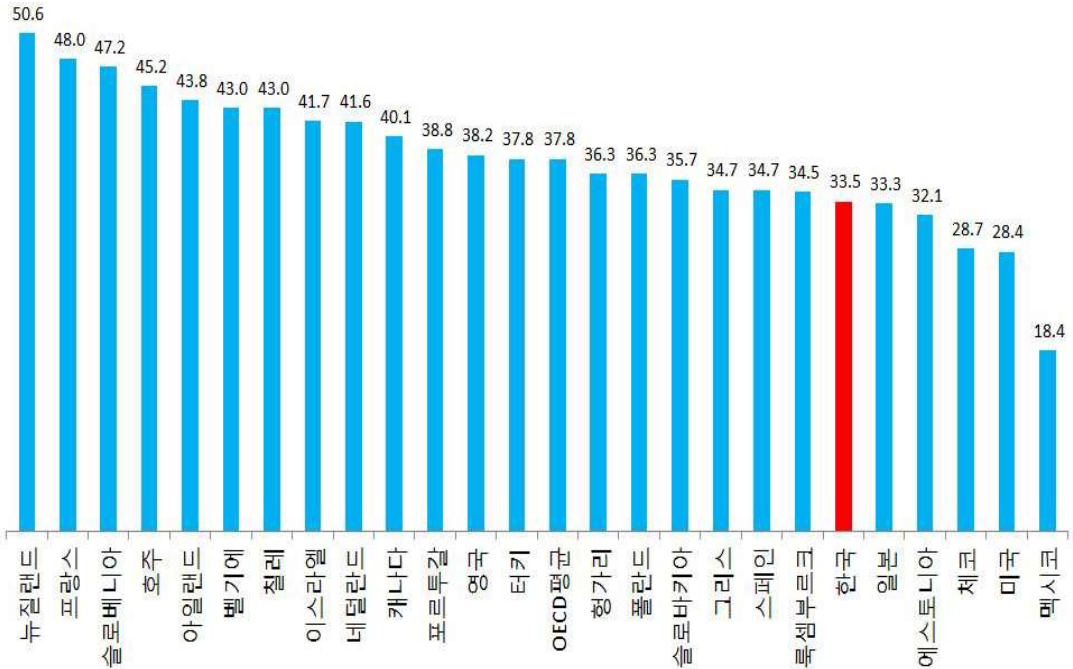
자료: 한겨레신문사(2015. 4. 2)

#### 4. 최저임금 격차

전일제(풀타임)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3.5%로 OECD 25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뉴질랜드(50.6%)로 가장 높고 프랑스(48.0%), 슬로베니아(47.2%), 호주(45.2%)는 4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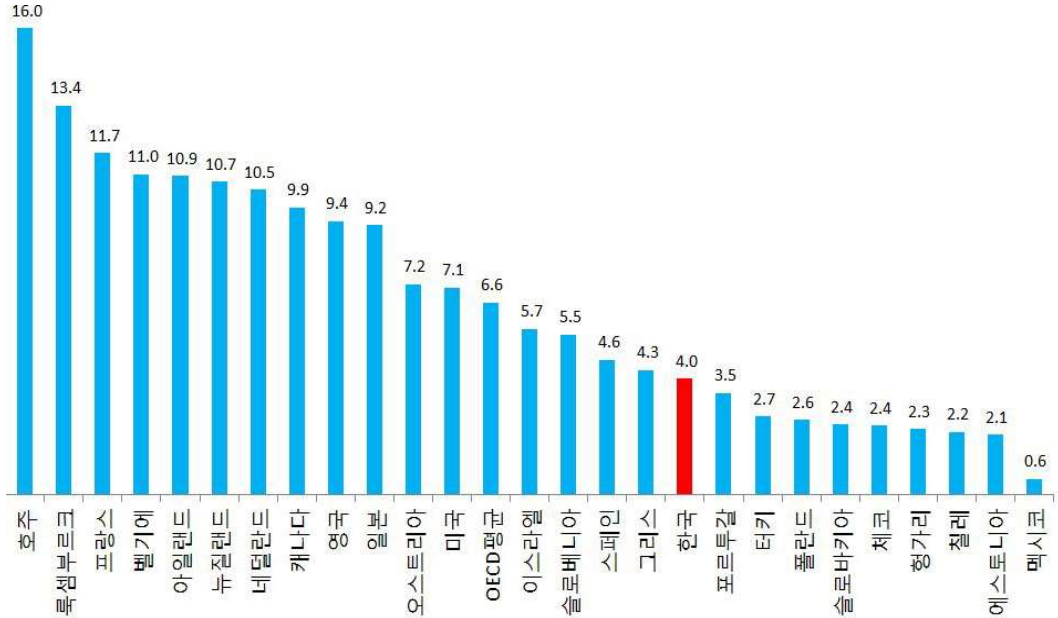


자료: 유병홍 외(2013)

2012년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3.98달러로 26개 회원국 중 17위로 나타났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16.0)이며 이어 룩셈부르크(13.4), 프랑스(11.7), 벨기에(11.0), 아일랜드(10.9), 뉴질랜드(10.7), 네덜란드(10.5) 순이며 우리나라의 2.5배 이상 높다.

[그림 9] 시간당 최저임금 (2012년 기준)

(단위: \$)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가구당 최소 생계비는 1인 가구 1,553,390원, 2인가구는 2,774,183원, 3인 가구는 3,363,173원, 4인 가구는 4,012,777원으로 제시했다.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703,036원, 2인 가구는 2,757,187원, 3인 가구는 3,687,533원, 4인 가구는 4,257,110원으로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보다 높다. 무엇보다 1인 이상이 생활하는 최저 생계비는 최소한 150만원 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7> 가구원수별 평균 생계비 통계

(단위 : 원)

| 가구원 구분 | 최저임금위원회   | 통계청       |
|--------|-----------|-----------|
| 1인 가구  | 1,553,390 | 1,703,036 |
| 2인 가구  | 2,744,183 | 2,757,187 |
| 3인 가구  | 3,363,173 | 3,687,533 |
| 4인 가구  | 4,012,777 | 4,257,110 |

자료: 민주노총

2015년 8월 최저임금 미달 자는 22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627만으로 볼 때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그림 10] 최저임금 미달자 수 및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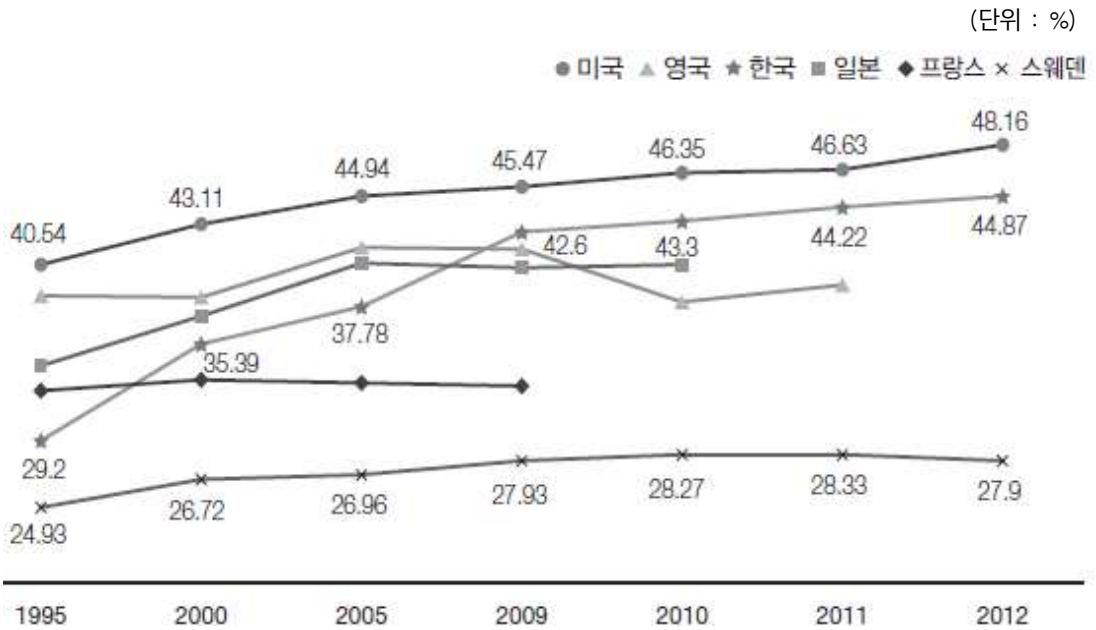
자료: 김유선(2016)

### 5. 소득불평등

우리나라의 상위10% 소득집중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과 비교하여 보면 1995년에는 미국>영국>일본>프랑스>한국>스웨덴 순으로 한국이 스웨덴 다음으로 낮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미국>한국>영국>일본>프랑스>스웨덴 순으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 국가별 상위 10% 소득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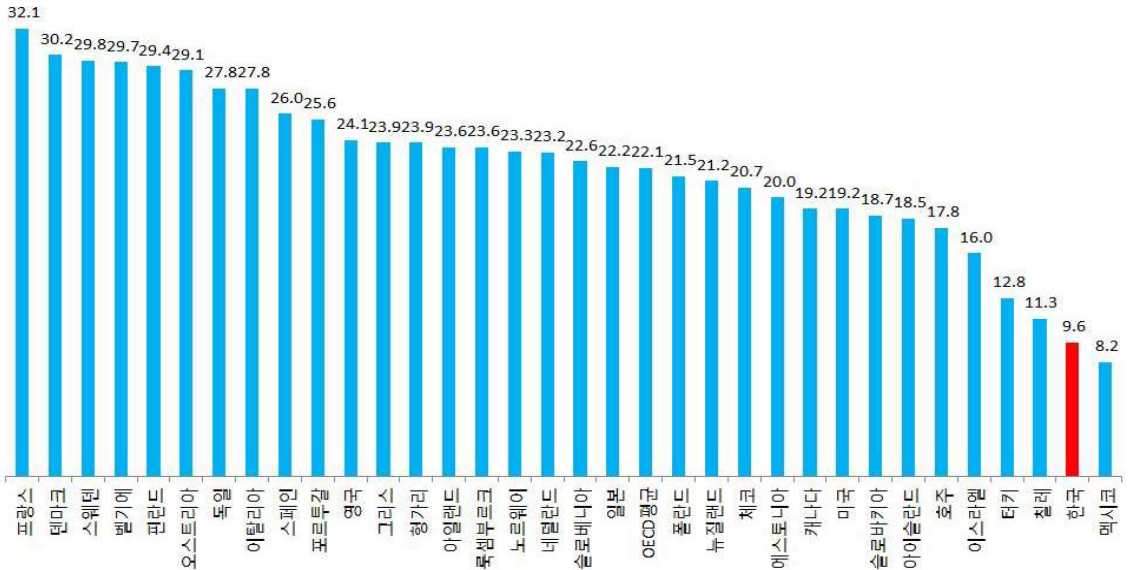
자료: 김유선(2016)

## 6. 각종 사회보장 제도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GDP의 9.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2.1%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프랑스(32.1%), 덴마크(30.2%), 스웨덴(29.8%), 벨기에(29.7%), 핀란드(29.4%), 오스트리아(2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2009년 기준)

(단위 : %)



자료: 유병홍 외(2013)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2015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정규직 82.0%, 84.8%, 82.4%인 반면 비정규직은 36.9%, 43.8%, 42.5%로 정규직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2014(8월) |      |      | 2015(8월) |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임금노동자 | 67.9     | 71.4 | 68.8 | 67.4     | 71.5 | 68.6 |
| 정규직   | 82.1     | 84.1 | 82.0 | 82.0     | 84.8 | 82.4 |
| 비정규직  | 38.4     | 44.7 | 43.8 | 36.9     | 43.8 | 42.5 |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각종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2015년 8월 현재 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84.0%이 비해 비정규직은 40.5%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여금, 시간외 수단, 유

급휴가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9> 고용형태별 근로복지 수혜율

(단위:%)

|       | 2014(8월) |      |           |              | 2015(8월) |      |           |              |
|-------|----------|------|-----------|--------------|----------|------|-----------|--------------|
|       |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수<br>당 | 유급휴일<br>(휴가) |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수<br>당 | 유급휴일<br>(휴가) |
| 임금노동자 | 68.3     | 69.3 | 47.6      | 60.2         | 69.9     | 70.0 | 47.2      | 60.3         |
| 정규직   | 82.0     | 83.5 | 58.8      | 73.7         | 84.0     | 85.0 | 58.4      | 73.9         |
| 정규직   | 39.5     | 39.7 | 24.3      | 32.0         | 40.5     | 39.0 | 23.7      | 31.9         |

자료: 통계청

직업훈련은 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임금이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은 58.1%이고 비정규직은 43.0%로 정규직보다 15% 포인트 정도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도 절반 약간 넘는 정도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 역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표 10> 고용형태별 직업훈련 경험

(단위:%)

|       | 2014(8월) | 2015(8월) |
|-------|----------|----------|
| 임금노동자 | 52.5     | 53.2     |
| 정규직   | 57.0     | 58.1     |
| 비정규직  | 43.1     | 43.0     |

자료: 통계청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며 사용자와 대등하게 단체교섭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2015년 8월 현재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16.9%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8%에 머물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들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11>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      | 2014.8 | 2015.8 |
|------|--------|--------|
| 전체   | 12.5   | 12.3   |
| 정규직  | 16.9   | 16.9   |
| 비정규직 | 3.1    | 2.8    |

자료: 통계청

### III. 정부의 노동정책

2010년 MB정부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다. 이를 줄여서 일반적으로 ‘고용부’로 부르고 있다. 이름에서부터 ‘노동’은 사라지고 ‘고용’만이 존재한다. MB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노동은 없어지고 ‘고용’만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핵심 이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청년 창업과 벤처 활성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동이 전제되지 않는 고용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을 강조하여 일자리만을 늘린다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질 나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012년 대선 때 ‘상사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먼저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율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직 비율은 20% 정도로 MB정부때와 큰 차이가 없다(김유선, 2016)

또한 정부는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얼핏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를 끌어내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규직들의 몫을 빼서 비정규직에게 준다는 정책이다. 국제지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수준도 OECD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여건은 아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양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와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일반해고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의 부도직전 등 경영상의 절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단순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실적 부진자 즉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실적부진의 개념이 애매하다.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동자는 고성과자가 되도록 교육훈련을 받는다. 교육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고성과자로 전회시키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성적이 미달되거나 저조한 노동자는 해고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논리적으로 맞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제도는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운털 박힌 노동자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위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업에서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해고한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을 때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저성과자들을 고성과자로 만드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철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분류되지 못하도록 관라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나 정부 모두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다른 것에는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고 요건 완화 등과 같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노동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조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등을 막을 수 있겠지만 노조 조직률이 3% 미만인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 임금체계 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만60세 정년 법제화 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기존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를들면 100만원 받던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만 55세 90만원, 만 56세 80만원, 만 57세 70만원, 만 58세 60만원, 만 59세 50만원을 받고 만 60세에 정년퇴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근무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도 함께 증가하는 제도이다. 연공급은 근무년수만큼 숙련이 향상되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제와 그동안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높은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 예를들면 은행에서 지점장을 했던 노동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면 기존 지점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지고 업무도 지점장 업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은행 창구 등 기존 직무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무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여 10년이 되는 은행권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직무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임금피트제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제이다. 직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기존 연공급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직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저성과자의 임금을 빼서 고성과자에 주는 제로섬(zero-sum)게임이다. 노동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노동 강도가 세질 수 밖에 없다. 경쟁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는 냉혹한 적자생존의 삶을 살게 된다. 임금체계는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사 갈등을 만들고 있다.

### 3. 비정규직 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35세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sup>2)</sup>. 지금까지는 2년까지만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년까지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에서 2년을 규정한 것은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 후 적응하고 직무 숙달이 되는 시기를 2년 정도로 보고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즉 2년은 수습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들어 2년 되기 바로 직전에 해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회피했고 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286만명이며 이중 35세 이상은 200만명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김유선, 2016).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상사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에 반하는 나쁜 정책이다. 특히 기간제 비정규직이 4년 동안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직무는 상사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지라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가 2년 되기 전에 해고한 것처럼 4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용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4년 동안에는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2년과 4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35세 이상의 경우 4년이 되면 30대 후반이 되는데 이직하기 더 어렵게 된다. 결국 또 다른 비정규 일자리를 찾아 비정규직이 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2년보다는 4년이 훨씬 유리하다. 새로 노동자를 채용하기 번거롭고 숙련도 향상되어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절대 노동자 입장이 아닌 기업 입장의 기간 확대 정책이다.

### 4. 파견 허용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 전면 허용',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 관련 업무 파견 허용',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대중 정권(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은 초기에 26

---

2) 그러나 35세 이상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려는 의도나 고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정부는 35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한다.

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한 바 있다. 그 후 노무현 정권(2006년)은 이를 32개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sup>3)</sup>.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의 경우 고령인력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활용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파견 허용 범위의 확대는 경영계의 오랜 요청 사항이었다. 특히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업종으로 결국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다는 신호이다. 정부 방침대로 한다면 현재의 32개 업종의 10배가 넘는 최대 400여개 업종에서 파견을 허용하게 된다(뉴스타파, 2015.2.15) 예컨대 전문직인 기자와 교사들도 파견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을 명분으로 파견법 적용 대상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는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현대자동차 소속이 된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를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대법원 판결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파견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중간착취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이뤄진 삼각고용관계에서 누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령자 취업확대라는 명분을 들어 현행 파견법의 기반을 흔들기보다는 기업의 불법 파견에 대한 관라·감독 강화로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행을 선행해야 한다.

## 5.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OECD 수준까지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것을 공약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연간 총 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695시간보다 무려 397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OECD 27개 회원국 멕시코(2,317시간)와 칠레(2,102시간) 두 나라뿐이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17시간), 네덜란드(1,334시간), 프랑스(1,402시간), 오스트리아(1,414시간), 벨기에(1,443시간) 등에 비해 연간 6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유병홍 외, 2013).

3) 현재 파견허용 업종은 주차, 경비, 배달, 전화교환, 음식조리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파견법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되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주당 20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여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규로 주52시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당 최대 60시간을 허용한다면 OECD 회원 국 중 노동시장 최장 국가라는 오명을 쉽게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V. 실천방안

### 1. 첫 단추 잘 꿰매진 총선: 지속적인 감시 및 이슈화

4.13일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막을 내렸다. 19대 총선에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몰락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123석으로 제1당이 되었으며 국민의당이 38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경향신문이 4월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불법파견 근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이 공통인 것으로 나타났다(2016.04.18). 더 고무적인 것은 20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간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당선자 다수가 즉각적인 단축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단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일노동뉴스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당선한 108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7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을 대상으로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주조·금형 같은 뿌리산업까지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기간제법은 108명 중 73명(67.6%), 파견법은 68명(62.9%)이 반대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주도한 새누리당 당선자 가운데 기간제법 개정엔 14명이 찬성했고 14명이 반대했다. 파견법 개정엔 17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야당은 반대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75명 중 56명(74.6%)과 54명(72%)이 각각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찬성한 당선자는 각각 16명과 18명에 그쳤다. 국민

의당 당선자 2명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60시간을,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52시간으로 제한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제도다. 수도권 당선자 108명 중 81명(75%)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24명이었고 3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서는 18명(64.3%)이 찬성했고 10명(35.7%)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중에서는 60명(80%)이 찬성, 12명(16%)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당(2명)과 정의당(1명) 당선자들은 전부 찬성했고, 무소속 당선자 2명은 반대했다.(매일노동뉴스, 2016.04.18).

| 20대 총선 여야 수도권 당선자 의식조사 (122명 중 108명 응답, 단위: %) |                         |               |               |               |               |               |               |               |                       |               |
|--|-------------------------|---------------|---------------|---------------|---------------|---------------|---------------|---------------|-----------------------|---------------|
| 구분   | 노동시간단축 방안<br>(근로기준법 개정) |               | 기간제법 개정       |               | 파견법 개정        |               | 노동이사제         |               | 공정인사 지침<br>(저성과자 퇴출제) |               |
|  | 즉시 시행                   | 단계적 시행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수도권 당선자<br>(108명)                              | 37.1<br>(40명)           | 55.6<br>(60명) | 29.6<br>(32명) | 67.6<br>(73명) | 34.2<br>(37명) | 62.9<br>(68명) | 75<br>(81명)   | 22.2<br>(24명) | 32.4<br>(35명)         | 65.7<br>(71명) |
| 새누리당<br>(28명)                                  | 32.1<br>(9명)            | 67.9<br>(19명) | 50<br>(14명)   | 50<br>(14명)   | 60.7<br>(17명) | 39.3<br>(11명) | 64.3<br>(18명) | 35.7<br>(10명) | 53.6<br>(15명)         | 46.4<br>(13명) |
| 더불어민주당<br>(75명)                                | 38.6<br>(29명)           | 50.6<br>(38명) | 21.3<br>(16명) | 74.6<br>(56명) | 24<br>(18명)   | 72<br>(54명)   | 80<br>(60명)   | 16<br>(12명)   | 24<br>(18명)           | 73.3<br>(55명) |
| 국민의당<br>(2명)                                   | 0                       | 100<br>(2명)   | 100<br>(2명)   | 0             | 100<br>(2명)   | 0             | 100<br>(2명)   | 0             | 50<br>(1명)            | 50<br>(1명)    |
| 정의당<br>(1명)                                    | 100<br>(1명)             | 0             | 0             | 100<br>(1명)   | 0             | 100<br>(1명)   | 100<br>(1명)   | 0             | 0                     | 100<br>(1명)   |

자료: 매일노동뉴스(2016.4.18)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남으로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노동개혁보다는 개혁이 적절한 표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야소야대일지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기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지속적을 이슈화시켜야 한다. 할 수 있다면 두 법에 반대하는 야당을 접촉하여 의

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 2. 생활임금 전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25세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6.7파운드(1만873원)에서 7.2파운드(1만1685원)로 올렸다. 영국은 2020년까지 9파운드(1만4607원)로 올리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왔고, 주별로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2022년까지 15달러(1만7205원)로 올릴 예정이다. 뉴욕주도 15달러로 인상키로 했다. 미국 대선주자들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부 주만 15달러로 올리고 연방 최저임금은 12달러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도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하고,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1만원대)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일부 주만 15달러로 올리고 연방 최저임금은 12달러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주간경향 1173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일급 48,240 원 월급 1,260,270원(월 209시간 기준) 정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3,390원, 통계청 제시 1인 최저생계비 1,703,036원보다 각각 30만원, 44만원 적은 액수이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가 200만명이 넘는다. 겨우 최저임금 정도만 받고 생활하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개념을 ‘최소로 주는 임금’의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나 통계청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최소 생계비가 생활임금에 접근하고 있다.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9000 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부터 실천해야 한다. 부교역자에 대한 대우 및 임금 상황이 열악하다. 2015년 기윤실 조사에 의하면 교역자들의 월 평균 사례비는 전임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임목사 사례비는 평균 395만원으로 나타났다(500만원이상(26.4%), 400~500만원(17.4%), 300~400만원(21.6%), 300만원이하(17.6%)). 부교역자들은 사례비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절반 넘게 응답했다(55.7%)(기독교연합신문, 2015.5.15).

현재 전임 부교역자들의 임금은 1인 가구일 때 생활이 가능한 액수이다. 물론 사택을 제공하거나 임금 이외에 기타 다른 것을 제공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측면으로 보면 높지 않다. 교회가 먼저 부교역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실천할 때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교회 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제 교회 외형적 성장과 아름다움

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한다. 교회가 도덕윤리적일 때 사회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 3. 노동주일

어릴때부터 우리는 일(노동)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죄악된 것으로 주일학교나 설교시간에 들어왔다. 신성한 노동보다는 죄악된 노동 인식이 강하다. 창세기 1장~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모습은 상상만해도 놀랍고 신비롭다. 특히 마지막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담)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에덴동산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셨다(창세기 2장 16절). 우리나라에서는 “경작”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work"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일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기 시작한다. 각종 동물과 새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첫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을 맞는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다. 인간의 죄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에덴동산에서의 명령 즉, 노동의 본질까지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경작(work)할 뿐만 아니라 다스림(rule)을 명령까지 주셨다. 경작(work)과 다스림(rule) 모두 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아담이 각종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에덴동산의 집사(steward)로서 관리(management)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 준다. 만약 아담이 과거에 에덴동산에서 일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뒤 절망감에 사로잡혔을지 모른다.

인간이 처음으로 노동을 하게 된 에덴동산에서의 일과 쫓겨난 이후에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에 고통과 수고로움이 추가된 것이다. 즉 에덴동산에서는 “노동≠생계”이 었지만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노동=생계”가 된 것이다. 곱이 바뀌었다고 속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곱이 탄 군 고구마가 되었다고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한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선한 노동을 통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고 훈련시키셨다.

예수님도 목수로서 노동을 했고 바울도 장막짓는 일을 수행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상인이나 농부의 일도 성직자만큼 거룩하고 존경할만하다고 했다. 해리 안토니데스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이 본 노동문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창 1:27~28)에 대한 응답으로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경배의 수단, 둘째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키는 도구, 셋째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피조계와 긴밀히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월 1일은 전 세계가 메이데이로서 노동절로 기념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체육대회나 등산을 통해 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노동절을 기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동의 본질을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본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노동을 강조하는 사람은 좌파 빨갱이로 인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동에 대한 원래의 생각과 노동의 본질을 안다면 노동의 신성함을 알 수 있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실천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전후 주일 즉 4월 마지막 주일이나 5월 첫째 주일을 노동주일로 선포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목사님들은 노동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고 대부분이 노동자들인 성도들은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강연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부터 ‘노동=저주’, ‘노동조합=좌파 빨갱이’ 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 참조문헌

- 김유선(2016),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2016), "최저임금 요구안 자료집".  
 유병홍 · 이정훈 · 박선진(2013),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연구원(2015),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2015), “KLI 노동통계”  
     (2015), “KLI 해외노동통계”  
 해리 안토니데스(1993, 유해신 역), "그리스도인이 본 노동문제", IVP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경향신문(www.khan.co.kr)  
 기독교연합신문(www.igoodnews.net)  
 고용노동부(www.moel.go.kr)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mimumwage.go.kr)  
 통계청(www.kostat.go.kr)  
 한겨레(www.han.co.kr)

*Memo*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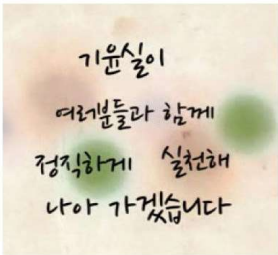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문위원(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왔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이사장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백종국(삼일,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Tel\_02-794-6200 Fax\_02-790-8585

Homepage\_www.cemk.org E-mail\_cemk@hanmail.net Twitter\_@giyunsil Facebook\_giyunsil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http://www.cemk.org)